

第205回國會

教育委員會會議錄

第1號

國會事務處

日 時 1999年7月1日(木)
場 所 教育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 1. 大學院中心大學育成(BK21)에 관한公聽會

審査된案件

- 1. 大學院中心大學育成(BK21)에 관한公聽會 1面

(14시07분 개의)

○委員長 咸鍾漢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에게 참으로 부끄러운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슴 아픈 날이었습니다. 우리 어른이라는 사람들의 부주의와 무관심으로 수십명의 재롱동이들이 화마에 휩쓸린 채 한줄기 연기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시뻘건 불길 속에서 고사리 손을 휘저으며 살려달라고 울부짖던 어린 영혼들의 절규 앞에 우리 모두는 무릎을 꿇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재롱동이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이 짊어져야 할 아픔을 함께 나누겠다는 마음으로 묵념을 올린 뒤에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동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立法調査官 金聲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委員長 咸鍾漢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한나라당 소속 安相洙 위원님,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申樂均 위원님과 李榮一 위원님이 우리 교육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었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참석하지 못하신 위원님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우선 安相洙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安相洙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相洙委員 안녕하세요? 安相洙입니다.

여러 선배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나라 교육정책이 잘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咸鍾漢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난 5월 사무처 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새로 배치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金基尙 입법심의관입니다.

南宮培弘 입법조사관입니다.

丘冀盛 입법조사관입니다.

朴燦洙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인사)

1. 大學院中心大學育成(BK21)에 관한公聽會

(14시13분)

○委員長 咸鍾漢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학원 중심대학육성(BK21)에 관한공청회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의거 3당 간사간의 합의에 따라 개최되게 된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99년도 교육부예산안 중 대학원중심대학육성에 대한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동 예산은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집행하도록 조건을 붙인 바 있으며 당시 李海瓚 교육부장관도 이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위 BK21 사업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여 고등교육체제의 개혁을 통해 고급두뇌양성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새로운 세기 나아가 새로운 천년 동안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결정할 실로 중요한 사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우리 나라 대학의 경쟁력이 너무 낮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고등교육체제의 대폭적인 개혁은 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국가발전의 요체라 할 수 있는 고급두뇌 양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요즈음 대학사회에는 적지 않은 동요가 일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청회를 개최하는 목적은 바로 이와 같은 동요의 원인이 무엇인지 과연 이 사업은 올바른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입법 및 예산심의에 참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해관계를 떠나 진정 이 나라 학문발전을 위해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에게 저희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참석하신 여섯 분의 진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술인 순서는 가나다순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權旭鉉 교수님입니다.

다음은 전국사립대학교교수협의회연합회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동 협회회의 명예회장으로 계신 중앙대학교 李在濶 교수님입니다.

다음은 포항공대총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동 대학에 교수로 재직중이신 張水榮 교수님입니다.

다음은 한국학술진흥재단 韓民九 사무총장입니다.

다음은 전남대학교 黃元杰 교수님이십니다.

끝으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회장이신 부산대학교 黃漢植 교수님입니다.

(진술인 인사)

다음은 공청회 진행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술인의 진술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교육부 고등교육지원국장으로부터 BK21사업

에 관한 보고를 들은 후 방금 전에 소개해 드린 진술인 순서대로 진술을 모두 듣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을 각각 일괄하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각 진술인의 진술시간은 15분 이내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해주시고 특히 진술인의 발언도중에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진술인 상호간에는 토론을 행하지 않는 것이 관례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金容炫 교육부 고등교육지원국장 나오셔서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教育部高等教育支援局長 金容炫 교육부 고등교육지원국장입니다.

두뇌한국21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선 사업추진 배경과 전개, 사업의 주요내용, 기대효과와 향후 추진일정 그리고 참고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먼저 1쪽의 사업추진 배경과 전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심 있게 본 우리 나라 고등교육의 현실입니다.

첫번째 일류대·인기학과 위주의 대입경쟁과 초·중등교육의 과행화에 따라서 연 10여조원에 이르는 과중한 대입 과외비 등의 사교육비 부담의 고통을 저희가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중등학교의 교육은 입시위주교육으로 학생들의 창의성 신장을 저해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대학의 독자적 지식·기술 창출 구조가 취약해서 21세기 세계 지구촌 상황에서 지식기반국가로 발전을 주도할 핵심엔진으로서의 세계수준의 교육과 연구를 수행할 대학원 육성에 소홀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표는 현재 우리 대학과 대학원의 현실을 도표화 해본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위의 양대 문제는 한 뿌리에 근원해서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대학원수준의 국제적 연구경쟁이 취약한 상태에서 국내대학간 학부수준의 진학만을 위한 소모적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뇌한국21 사업추진 목적을 저희는 크게 네 가지로 두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대학입학제도의 근본적 전환을 통한 초·중등교육의 정상화입니다. 막대한 과외비등 소모적 진학경쟁을 불식하고 학력만이 아닌 지·덕·체가 조화된 새로운 초·중등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독자적 지식·기술의 창출 기반구축을 위해 연구에 중점을 둔 세계수준의 대학원 집중육성과 지역대학 특성화를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경쟁력에 직결되고 국제적 비교우위 확보가 가능한 과학기술 전략분야등 경쟁력있는 일부 대학원을 육성하고 지역 산업수요에 연계하여 특성화된 우수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지역 우수대학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제 조기도입으로 학부 위주 진학풍토를 대학원 위주 진학풍토로 전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학생수, 학교규모 경쟁에서 학사의 질 위주 경쟁으로 전환해서 이제는 공부하는 학생, 연구하는 교수라는 새로운 대학풍토를 진작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동안 입시위주의 교육과 초·중등학교의 고질적인 사교육비의 근본원인이었던 대학입학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초·중등교육을 바로잡고 고등교육체제의 고도화와 기능분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하여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한국을 주도할 재능과 실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 동안의 추진경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중에 초·중등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연구중심대학 육성이 라는 사업을 100대 과제로 선정을 했고 다시 이것을 98년4월에 저희 교육부 업무보고시 보고를 드려서 대학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국민의 사교육비 고통경감을 하는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98년8월부터는 대학원중심대학 육성분야 선정을 위해서 학술진흥재단 심사평가위원회 설문, 한국공학교육인증위원회 설문, 교육부 장관 실리콘밸리 방문 및 재미과학자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99년1월부터 4월까지의 국내·외 석학 간담회 및 지역별 대학 간담회를 11회 개최해서 국내·외 대학과 산업계의 의견수렴을 했고 99년4월과 5월에는 국회 간담회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교육부 장관이 교체가 되면서 당초

사업공고를 1주일 늦추면서 다시 세군데 지역별로 사업공고 전 사업설명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서 당초 생각했던 안 보다는 보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보완내용은 교수의 논문실적 요건 충족비율을 완화해서 보다 많은 대학과 신진 연구인력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2·3개 대학교간의 연합을 권장함으로써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새로운 대학문화창조를 기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에 99년6월4일 「두뇌한국 21사업」을 공고했습니다.

분야별 공모경쟁방식으로 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수 1인은 한 사업에만 신청하도록 하여 중복지원이 배제되도록 공고하였습니다.

이어서 6월16일 두뇌한국 21사업 설명회를 충남 대학교에서 개최해서 100여개 대학의 400여명의 교수가 참여해서 실무적인 질의·응답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의 주요내용과 그중 세부 사업내용은 표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우선 이 사업은 크게 세가지 영역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계수준의 대학원과 지역 우수대학 육성은 99년부터 2005년까지 7개년에 걸쳐서 연간 2,000억씩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그중의 첫 번째가 과학기술분야에 900억원을 투입하고 그 분야는 정보통신, IT, Bio-Tech, 기계, 재료, 화공, 물리, 화학 등이고 사업단의 규모는 교수 20 내지 50인, 선정 사업단 수는 분야별 2·3개이고, 사업단별 지원액은 25억 내지 7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문사회분야는 100억원을 배정해서 한 국학, 문화, 동아시아, 사회발전, 정보·지식기반사회 분야 등을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역우수대학 육성에는 매년 500억 원씩을 7년간 투입하는 사업인데 각 권역별 지원액은 고등학생수와 대학생수를 기준해서 부산 75억, 울산·경남 60억, 제주에 15억 원씩 등 해서 균형되게 배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이 2,000억중에서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대학원 전용시설 구축을 위해서 500억원을 별도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이 대학원 연구력 제고사업에 495억 원입니다.

이 495억원은 기존의 학술연구진흥비 1,000억을

성격을 달리해서 우선 특화분야에서 150억원, 핵심 분야 345억원을 배정하고 나머지 505억원은 당초 목적대로 학술연구기반 조성사업 전 분야에 균형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업내역을 조금 더 요약해서 강조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대학교육 개혁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 주관하에 대학 전체 차원의 대학별 입학제도 개선과 연구비 중앙관리제 도입 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업단에 참여하는 분야와 교수에게는 업적평가에 따른 교수 유인체제, 학사과정 정원감축, 대학원 문호개방, 대응자금 확보, SCI급 논문게재 의무화 등 개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창의적·국제적 수준의 신진 연구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자금의 약 70%을 장학금, 연구조교, 해외연수 등에 지원함으로써 대학원생이 안정되게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양성에 초점을 둬으로써 다른 부처의 연구지원과 차별화를 두고 있고 반면에 다른 정부부처에서 하고 있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지원예산 약 3,000억원도 중복지원을 피하도록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산·학협동 강화 및 자립기반 조기달성입니다.

산업체와 사업과제 공동수행 등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산업체 대응자금 확보 및 산업계에 의한 성과를 평가해서 과학기술분야의 경우 연 25% 이상 산업체 대응자금과 연계해서 이 연구의 생산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구성과의 산업화를 위한 학내 지원체제 구축 및 자립화에서는 학내 벤처 육성이라든지 지적재산권·국제특허 출원 등 종합적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사업기간 종료후 산·학협동 등 기금을 조성하여 자립경영체제로 전환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계수준의 외국대학원 벤치마킹을 통한 국제협력입니다.

사업단은 세계수준의 대학원을 벤치마킹하여 학사, 교과과정 운영 등 혁신을 해야 되고 장·단기 해외연구 기회 부여로 국내 경쟁에서 국제수준의 경쟁으로 전환코자 합니다. 또한 외국 우수대학, 현지 벤처기업 등에 현장실습 등의 협력프로그램 개설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효과적으로 된다면 저희는 이러한 기대효과를 바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입학제도 개선으로 초·중등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비가 경감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적뿐만 아니라 적성과 인성을 중시하는 다양한 선발제도가 이미 각 대학에서 발표가 되고 있고 2,000억원의 예산으로 연간 10여조원의 사교육비 부담구조를 개선한다는 것은 획기적인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학교육의 기능분화와 특성화 촉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대학은 학부교육 무게를 줄이고 대학원 교육에 치중함과 아울러 일부 대학은 실용위주의 학부 교육에 치중하면서 대학원 교육 유지 발전을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이 사업을 통해서 연간 2,000여명의 경쟁력을 갖춘 세계수준의 박사인력을 양성하리라고 기대합니다.

네 번째는 SCI급 논문발표수 1만편에서 2005년도에는 2만편으로 증가되어 세계 10위권으로 진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특허출원 건수는 1만7,000건에서 2005년도에는 4만건으로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해외유학 대체로 연 2억불의 외화지출 절감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진연구인력 지원효과 면에서 본다면 박사후 연수과정에 연간 약 1,000명씩, 연구전담계약교수 연간 약 2,500명씩, 전문기술자 연간 약 200명씩을 채용토록 하는 기대를 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4일 공고한 이후에 7월초에 기획조정위원회와 분과위원회 구성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말씀을 올릴 것은 사업별 평가를 할 평가단의 구성별 분과위원회는 가급적 이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대학의 우수한 교수와 산업계 연구기관에 있는 분으로 구성해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려고 합니다.

7월중에는 세부 심사평가 기준을 수립·확정하고 7월20일날 신청서 접수 마감하고 8월20일까지 분야별 신청서를 심사해서 8월말까지는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따른 정부와 해당대학 총장간에 협약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참고자료에 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동안 제기된 쟁점사항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집중지원과 균형지원의 문제입니다. 이 2,000억원 지원사업은 기존 1조3,000억원의 대학지원예산에 새로 추가된 신규사업입니다. 또한 2,000억원으로 모든 대학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학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세계수준의 연구단이 구성될 수 있는 대학원에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술진흥사업비 1,000억원은 미참여 대학과 교수에게 지원함으로써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기존 1조3,000억원의 예산은 종전과 같이 평가 후에 예년과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원대학 사전결정 오해라는 내용입니다.

아까 보고를 올린 대로 사전설명회 이후 기준을 완화해서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성을 보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하지 않은 대학중심의 유능한 교수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하고 이를 다시 해외석학이나 벤처기업 인사로 해외자문단을 구성해서 자문을 받아서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또 각계 권위자로 구성된 기획조정위원회가 최종 선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수도권 대학은 연구, 지방대학은 교육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저희 교육부는 모든 대학은 교육과 연구·봉사기능을 공유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우수대학 사업은 지역의 산업수요에 적합한 우수인재 육성에 치중되 대학원 연구기능은 더욱 유지·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대학의 대학원 연구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저희가 봐서는 세계수준 대학원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오히려 학부정원은 줄이고 대학원 정원은 동결하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지방대학이 더 유리할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의 논쟁점이 대학원 문호 50% 개방으로 지방대 출신 이동문제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학원 문호를 50%로 개방할 경우 타 대학 학부 출신 입학자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대의 경우 현재 30%가 타교 출신 진학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20%를 증가

할 경우에는 추가 500명만 더 진학시키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 대학의 석사과정 입학생수가 6만7,076명이고 박사과정의 현재 정원은 1만1,170명입니다.

다음은 대학 서열구조를 고착화할 우려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대학은 수능성적으로 학부 서열구조가 이미 고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 입학제도의 개선으로 수능성적에 의한 서열구조가 개선되고 일부 대학은 학부위주로 치중하는 것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대학별 역할 분담과 특성화로 대학 서열구조도 분야별로 경쟁체제로 가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일부 대학 특혜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선정되는 분야 및 교수에게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입학시험제도의 개선, 학사조직 개편, 학사과정 정원 30% 감축, 교수업적평가제, 연구비 중앙관리제, 대학원 문호개방, 박사논문의 국제학술지 의무 게재, 교육과정 개편, 대응자금 25 내지 30% 확보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릴 것은 대학 전체가 참여하는 것은 입학시험과 연구비 중앙관리제에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사업단에 참여하는 교수에게만 해당됩니다.

이러한 제도개혁을 통하여 본 사업에 선정되는 대학이 우리나라 대학의 구조와 풍토를 개선할 수 있는 촉매가 되므로 특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문학등 기초학문이 앞으로 어렵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응용분야는 산·학협동, 기초학문은 국가가 보호·육성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정책기조입니다. 인문학등 인문사회 분야에도 이번 BK21사업을 통해서 기존 예산외에 1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진흥비 등에 기초학문을 별도 설정해서 종전대로 지원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 나라 대학에 대한 각종 지표를 국제비교해 놓은 것을 실었고 우리하고 경쟁이 되는 일본, 대만, 중국, 미국, 싱가포르의 외국이 어떻게 대학원 육성과 두뇌개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실어드려서 참고하시도록 했습니다.

이상 보고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威鍾漢 金容炫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權旭鉉 교수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述人 權旭鉉 서울대학교의 權旭鉉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의 보직에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특히 연구에 남다른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위 정보, IT에 가장 가까운 서울대학에서도 가장 큰 전기공학부의 학부장을 하면서 대학을 개혁해 보려고 한 번 연구를 열심히 추진을 해왔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분야의 학회장도 했고 또 세계학회에 제가 회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분야는 어떻게 하면 된다는 감을 조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기반해서 제가 이 프로그램에 대해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지식사회에서 대학이 중요하다 하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고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현행 우리의 연구수준하고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는 문제, 내부의 제도가 없는 문제 이 두가지가 원인입니다.

원인분석을 한 후에 전체적인 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방향이 BK21사업에는 이렇게 구현되어 있는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쟁점에 대해서 몇가지 소개해 드리고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선진국은 GDP의 20%를 교육에 관한 것에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연구개발에 관한 것은 3 내지 5 %입니다. 그래서 정보화로 인하여 국가간 벽이 없어지고 따라서 세계에서 1등만 살아남는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화가 70 내지 80%가 영어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못 하는 사람은 앞으로 도태된다는 그런 환경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혁신체제가 가동이 되어야 되는데 국가혁신체제는 대학이 있고 산업체연구가 있고 국책연구소 연구가 있습니다.

이중에 대학이 맡을 것은 창의적 기초연구이고 이것이 산업계와 국책연구소와 연계되어가지고 국가의 창조적인 지식기반을 창출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창출은 모든 국가가

요즘에 와서는 대학을 중심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황을 보면 불행하게도 우리 GDP가 12위인데 R&D 투자액은 무려 7위까지 된다는 보고가 있는데 그런데 R&D 경쟁력은 22위라든가 SCI논문이 전부는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통계이니까 그것도 17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경제력에 비해서 연구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학, 응용과학에서는 기술수준을 나타내는 특허면에서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 원인이 현재 대학에 지원하는 재정이 부족하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이고 학생 대 교수 수도 부족하고 R&D투자도 정부부분이 외국에 비하면 반밖에 안 되고 R&D 투자중에서도 대학이 사용하는 것이 선진국에 비해서는 반밖에 안 된다는 그런 원인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투자를 더 해야 된다, 그러면 대학에 돈만 주면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대학의 내부제도,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제도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대학내에 평가제도가 실질적으로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인센티브도 없습니다. 잘 하고 못 하고간에 차별이 없습니다.

또 대학에서는 산업화하려면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혼자서는 안됩니다. 일본은 몇 분의 교수님이 조직이 서열화되어 있고 독일에는 더 합니다. 단 미국은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하고 저희 나라가 미국식을 따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는 조직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더군다나 대학에는 제가 보기에 리더십이 없습니다. 특히 선거로 된 조직에서는 어떻게 푸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더십이 없는 것도 문제일뿐 아니라 교수 스스로도 개혁의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대학에 외국과 경쟁할 수 있는 큰 조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으면 제 생각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식창출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우선 대학의 제도개혁이 전제되어야 된다, 무엇보다도 제도개혁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에 일부 포함이 되

어 있고 그 다음에 교육부는 타 부처와 달리 차별화할 때 인력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야 된다

저희 대학은 외국과 비교해 보면 교수 수라든가 아니면 연구원 수라든가 Post-Doc이라든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인프라 구축할 때 교육부가 도와주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연구중심, 교육중심으로 분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되었습니다마는 집중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가능하면 규모가 큰 것을 대학에서도 한번 지원해 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사업단장과 총장,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특히 응용과학, 특히 제가 속한 공과대학이 현재 공학분야에서 BK21사업에서 돈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실용화되지 않고는 나중에 낭비가 되면 큰 일이다 그래서 실용화교육이 무엇보다도 강조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제추세에서 나오되면 안되고요.

앞으로 모든 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보급될테니까 인터넷을 통해 연구결과가 확산되어야 되겠다 이런 총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이 동의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향에서 제가 이 BK21사업을 보았을 때 대략 그 방향으로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도개혁 추진에 대해서 아까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강조되어 있는데 저는 연구중심이라고 그러면 입학도 중요합니까마는 그것보다도 대학의 제도, 대학의 승진규정 아니면 채용규정 이런 인센티브제도가 사업단위주로 강화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마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성화방향으로도 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특성화방향이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주어진 제도 내에서 특성화되어야 된다는 큰 흐름에는 제가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유망분야를 집중할 때 어떻게 집중할 것이냐 여기에도 상당한 안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예시되었던 정보, 생명, 기계 이런 분야들은 제가 보기에든 혹은 외국의 전문가들 보기에든 분야가 제대로 되어 있다 하는 감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큰 규모의 연

구집단을 구축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MIT 같으면 교수가 100명이 합니다. 우리가 경쟁하려면 교수가 최소한도 100명이든가 50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큰 규모로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았을 때 한 50명, 30명, 20명 이 정도도 미국대학에 비하면 미국대학의 반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규모를 키우는 것도 방향에 맞는 것 같고요. 따라서 세부학과가 통합되는 것도 같은 방향 같습니다.

그리고 재원의 대부분이 아까 제가 들어보니까 대학원생을 통해서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기금, 교수라든가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참여하는 교수님이 보통 얘기하는 직접 혜택을 못받게 하는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든 좋은 방향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제화에 떨어지면 안되니까 국제화프로그램도 제가 보기에 적절하게 강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영어교육이 강조되어야 할 것 같고요. 제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BK21사업이 응용쪽인 공학쪽에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이 낭비가 없어야 합니다. 아까 인문사회계통은 예산에 비해서 추가로 100억이 들어간다고 그랬었는데 돈이 적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응용과학 분야에 특별하게 관리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특별하게 실용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산업계에 인풋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큰 나라는 이것과는 좀 예외입니다마는 일본이나 독일갔을 때 산업계에 영향이 없는 연구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쟁체제로 하는 프로그램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한 연구확산도 프로그램에 적절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쟁점으로 부각된 것으로 실지 연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보았을 때 가장 큰 것 예를 들어서 계약제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들어보면 연구를 하는 대학원에 대학원생이 증가하거나 선발을 많이 하게 되면 그렇지 못한 대학의 연구인력을 뺏긴다. 따라서 제 주위에 있는 연구를 많이 하시는 교수님들은 연구를 하는 능력이 저하된다 이런 것을 가장 두려워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에 보니까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혜택을 많이 받는 좋은 시설에 우수한 사람을 키워야 된다는 것 또 공개함으로써, 어느 조직이 개방됨으로써 활성화 된다는 그런 원칙하고는 위반됩니다마는 그런 좋은 원칙이기 때문에 부

분적으로 이 얘기가 맞기는 합니다마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아마 피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또 다른 방법이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들은 쟁점은 지역우수대학이 학사과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사과정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우리가 도리어 연구할 것이 약화된다. 교수님들은 근본적으로 연구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던 학부학생의 학사과정을 우수하게 키움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취직이 잘 되고 또 유학 보내는 심정으로 또 좋은 데 보내고 이러한 것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마는 당장 학부에 너무 시간을 뺏기면 연구력이 줄지 않느냐? 대학교 교수님들은 연구로 계속 평가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장점이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소규모대학은 처음부터 들어 가지 못한다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외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큰 규모로 해도 벽찬데 소규모로 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런 걱정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분야를 예시하는 것이 어느 특정분야를 지원함으로써 그렇지 않는 분야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냐 이런 불평이 많습니다마는 제가 설명듣기로는 분야는 들어올 수 있다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국가적인 입장의 중요한 분야를 나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나열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고 느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우수집단,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학쪽에 있습니다마는 공학이라면 MIT, 스탠포드인데 그 대학과 경쟁하려면 벽이 참 큼니다. MIT는 교수가 한 100명이고 미시간주립대학도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 대학은 아무리 많아도 한 50명일 것입니다.

그래서 큰 규모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선진국 수준의 제도개혁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이 BK21사업에 저 개인적으로는 제도개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안되면 낭비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구사업단중심으로, 왜냐 그러면 돈을 많이 쓰는 것이 연구사업단이니까 그렇지 않은 모든 대학을 이 제도 바꾸는데 끌어들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중에는 인사승진제도가 특히 중요하고 학생들이 연구를 하는 쪽에 왔다갔

다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수님들도 사실 왔다갔다 해야 합니다. 교수님은 한 군데 박혀 있고 학생만 가면 안되고요. 교수도 같이 바뀌어야 할텐데 우리나라는 교수이동이 참 힘듭니다. 이것도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은 아마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계약교수들이 많이 생길 것 같고 계약교수는 상당한 수가 탈락이 될 수 있으면 자동이동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과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모두에 저희 나라가 R&D투자가 외국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정부투자가 부족하고 대학의 지원이 반밖에 안됩니다. 이것이 되면 여기에 또 참여하지 않는 또 다른 대학도 새로운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이것을 좀 건의합니다.

이것으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권교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李在潤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述人 李在潤 과분하게도 저에게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마음으로 감동깊고 또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정말로 밤잠을 못 자면서 고민을 했던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문제에 저희 교수들이 이렇게 고민을 하고 오죽하면 지난 6월15일 부산에서 1,000명의 교수님들이 같이 집회를 갖고 가두행진을 했고 또 돌아오는 7월8일날 오후2시에 명동성당에서 옥외 집회를 갖고 적선동 정부청사앞까지 가두시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1,000명 이상 되는 교수들이 이렇게 거리로 나오지 않으면 안되는가 하는 정말 절절하고 마음아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것은 돈 2,000억원, 3,000억원의 배분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진정으로 고민하는 것은 우리나라 180여개에 달하는 4년제 대학에 개성있고 다양한 창조적 연구 및 교육문화풍토를 바로 이 BK21이 그 명칭과는 정반대로 황폐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저는 불을 보듯 환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인물을 가지고 차분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제목은 비민주적 두뇌한국21계획과 대학정책의 전면 백지화 및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새로

운 대학교육 개혁정책의 입안을 제안합니다.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는 반민주적 두뇌한국 21계획과 대학정책의 전면 백지화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대학교육개혁정책을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입안할 것을 정말 진정으로 제안드립니다.

金大中 대통령께서는 취임식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대학교육 개혁안을 임기중에 달성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 1년4개월간 대학교육개혁에 걸었던 우리의 기대를 산산이 무너뜨렸고 대학은 교육부의 눈치만 살피는 시녀로 전락시켰습니다.

교육부는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와 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에 속한 교수들을 철저히 배제한 가운데 교육부 주도의 탁상 밀실행정으로 특정 대학에 대한 특혜지원을 할 가능성이 많은 두뇌한국21을 졸속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절대로 부당한 것이므로 전면 철회되어야 합니다.

교육부는 지금부터 현장의 교수들의 참여하에 21세기를 향한 학문의 창조성과 인간과 자연의 생명관의 본질에 충실한 새로운 대학개혁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은 1년이면 충분합니다.

정부에서 매년 2,000억원을 7년동안 총 1조4,000억원을 들여서 세계수준의 대학원육성 및 지역우수대학육성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 1,000억원이 추가로 되어 있는 것이 셋째 사업, 넷째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계획의 철학과 기본방향 그리고 수립과정에서 절차상에 이미 반민주적인 하자가 명백히 발생했고 철학과 기본방향이 잘못되었으므로 운영내용에 부당성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소제목으로 좀 외람됩니다. 마는 '교육부의 대학교육에 대한 철학이 빈곤하다' 하는 문제하고 둘째는 '교육부의 정책입안과정이 비민주입니다' 하는 것하고 셋째는 '교육부의 사립대학 교육개혁추진에 대한 기본방향이 없다' 하는 것하고 넷째 '두뇌한국21 내용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마지막으로 대안을 제안하는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대학교육에 있어서 철학이 빈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단기적으로 작은 물질, 재정지원으로써 유인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단기적인 효율성과를 높이겠다는 상품시장 원리를 직접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부를 기업부로 개명하기를 원하는 처사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뇌한국21이라는 과대 포장된 홍보전략이 있는 듯합니다. 이 정책에서 자칫하면 두뇌있는 대학과 두뇌없는 대학의 구분이라는 것이 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가운데 사립대학, 지방대학 많은 대학의 교수들이 밤에 불을 밝히며 연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소외가 되거나 탈락되는 경우에는 두뇌없는 대학으로 본의 아니게 낙인을 찍히게 되는 이와 같은 황폐화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은 차라리 없어도 괜찮습니다.

대학교육개혁에는 효율에 가치를 두기 보다는 존재의 가치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창조성, 학문체계 개발과 인간관과 자연의 생명관의 탐구와 열린교육 그리고 교육정의의 실천을 지향하는 것이 교육정책의 근본인 것입니다.

교육부는 단기적인 효율성과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 창조적 연구 문화 및 교육풍토조성에 충실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절절하고 뼈아픈 호소입니다.

교육부지도층의 철학빈곤은 대학운영자, 교수, 학생들로 하여금 학문과 교육에의 사명의식과 신념에 찬 정진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 막고 눈앞의 재정지원이라는 허울로 들뜨게 만들어 전국의 교수와 학생들을 소란속에 빠뜨리는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학생들의 연간 등록금수령액이 1,500억원이상 되는 대학에 있어서는 교육부의 재정지원금 30억원 정도는 큰 의미를 재정적으로 지니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못 받았을 때 연구능력이 없는 못난 대학으로 낙인이 찍히는 결과가 되어 그 대학의 재학생들이 대학당국과 교수를 불신하는 결과는 낳게 되고 따라서 항의집회로 인하여 학사행정을 마비시키는 사태로까지 발전시킬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그 대학의 학부나 대학원에 우수한 지원자를 받아 들이기가 지극히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그러진 대학간의 상대적 서열화의 심도는 어린 고등학생들의 일류대학병을 고질화시키게 되고 따라서 고등학교 교육을 파행으로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대학학부와 대학원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까지도 황폐화시키는 처사인 것입니다.

둘째 교육부 정책입안과정이 비민주적인 것입니다.

두뇌한국21, 교육개혁 5개년계획들을 불과 5개월 동안에 졸속 급조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와 전국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 의 충청어린 참여의사를 철저히 배제하였던 것입니다.

본인은 외람됩니다마는 지난 몇 년동안에 전국의 교수들의 뜻을 모아서 무진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배척 당하였고 많은 청원을 하고 교육부에 많은 공문을 보내고 또 공청회도 다녔습니다마는 그 결과 교육부공문에서 얻은 것은 '업무에 참조하겠다' 라는 간단한 한 줄에 불과했습니다. 진지한 논의의 기회를 단 한번도 갖지 못 하였습니다.

또 교육부 전직 혹은 현직 장관도 우리 전국교수협의회회장단의 예의를 갖춘 면담요청을 간단히 거절해 버렸습니다.

교육개혁5개년계획 책자 끝부분에 보면 작성자명단에 약 50여명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들 50여명중 44명은 교육부장관, 차관을 비롯해서 관료들의 이름들이고 나머지 6명만 전문위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책입안과정의 비민주성과 졸속행정을 나타내는 예들이며 따라서 이러한 계획안은 정치선전, 홍보효과의 인상이 짙다고 보겠습니다.

셋째 교육부의 사립대학교육개혁추진에 대한 기본방향이 없습니다. 대학의 창조적 문화창달이라고 하는 문제는 그 사립대학에서 근본문제는 교육부, 대학재단, 총장, 보직자로 이어지는 수직적 통제권력구조인 것이며 학문과 교육현장의 평교수들을 철저히 배제하는 것인데 교육부는 이를 자기들의 지배편의상 계속 심화시키는 가운데 말로만 대학자율과 자치를 내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학자율과 자치는 교육부, 대학재단, 총장, 보직자로 이어지는 하향식 수직권력구조에 내재된 불법비리 및 부당행위 그리고 또 경직성에 대한 구성원인 평교수협의회에 심의·평가·견제 기능이 법제도화해야만 되는데 그를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정책당국은 전혀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교육부 관료의 50% 이상은 학문과 교육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교체하고 폐쇄적 관료행정을 타파하는 교육부 개혁을 제일보로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문제가 있는 것을 제기하는 수많은

평교수들은 재임용에서 부당하게 탈락되고 해직되며 사직서 제출이 강요되어 그 숫자가 이미 500여 명을 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70 명이 됩니다. 이들에 대한 공정한 재심사와 복직의 제도적인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립대학 내지는 국공립대학의 창조적 학문풍토를 만드는 기초라고 보겠습니다.

두뇌한국21 내용의 부당성입니다.

현재 BK21은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서울에 위치한 몇몇 유명사립대학을 사실상 중점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서열화되어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의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사실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우수교수를 발굴하는 문제는 오히려 뒷전입니다.

교육부에서 지원대상대학으로 선정된 뒤에 중간평가를 하는데 중간평가의 항목으로써 학사과정과 입학전형제도의 개선, 대학원 문호의 개방, 교수업적 평가와 인사와 계약임용제 및 연봉제의 도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우수두뇌의 양성과 대학교수의 계약임용제 및 연봉제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겠습니까? 이는 정부의 지원을 미끼로 교육부의 시책을 대학에 강요하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컨대 교수계약제와 연봉제의 시행은 대학교수 임용제도의 개방성과 경력대학교수의 대학교간 자유로운 이동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전체 시장조건이 없이 계약임용제도와 연봉제를 실시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뿐입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서 재단이사장과 총장이 무소불위의 인사권과 재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터에 불평등 일방적 계약임용과 폐단이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또 이 사업이 대학 단위로 실시된다는 점에 큰 우려를 표합니다. 이것은 또 전국 각 지방에 있는 소장층의 연구역량을 효과적으로 결집시킬 방도를 강구하지 않은 채 현재의 일류대학들에 지원을 집중시킨다는 것은 일류대학의 난맥상을 국가적인 규모로 확대 재생산하는 결과를 사실상 촉진시킴에 지나지 않습니다.

두뇌한국21은 현재의 대학서열에 준해서 입안한 것으로서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불평등을 조장하고 경쟁질서의 공정성을 저해할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철학적인 논쟁이 많이 일어날 하겠습니다. 교육과 학문은 존재가치입니다. 단기효율보다는 존재

가치가 우선합니다.

두뇌한국21은 참여자 선정 및 사업결과 평가에 있어서 신뢰할만한 그 어떠한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기준과 참여절차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지난 몇 년간에 걸친 교육개혁 우수대학 선정은 교육부의 개혁구도에 부응하는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었지 연구역량의 우수는 아니었습니다. 96년 학부제운동을 계기로 시작된 교육개혁의 파행과 부작용을 볼 때 교육개혁 우수대학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개혁이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동안에 93년의 기초과학센터 육성 또 96년의 국제관계대학원 설립 그 뒤로 여러 가지 조치가 있습니다마는 수 백억의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모든 것은 지금 와서 실종된 결과를 보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원 중심대학, 특화분야, 핵심분야 등 두뇌한국21사업을 평가 선정함에 있어서도 각 대학이 제출한 장미빛 청사진만 보고 선정할 것이 뻔합니다. 두뇌한국 자료를 보면 사업단, 팀, 사업주체, 대응자금, 사업팀장 등의 용어가 자주 나옵니다. 연구책임자를 업자로 표현하는 탁월한 발상의 전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업자가 입찰에서 공사를 따내는 그런 심정으로 학문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이번 사업안을 보면 그 용어구사에서 이미 연구자들을 업자로 내몰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신지식인은 형이상학으로 어떻게 돈을 만들까를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해야 됩니까? 어찌면 모든 연구자가 업자가 되어야 마땅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대안을 몇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정부는 두뇌한국실행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와 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가 참여하여 새롭게 대학교육개혁계획을 수립토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참여민주주의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서울대학을 중심으로 한 소수 일류대학 중심으로의 지원을 철폐하고 사회와 연계될 수 있는 각 대학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됩니다.

전국 대학교수들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 후에 우수한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완전히 판을 새로 짜는 새로운 대학원 중심대학, 기존의 일그러진 서열화된 대학이라는 개념은 여기서 썩 빼버려야만 됩니다. 교수가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사회적 요구에 정당하게 기여할 수 있는 공적 통로를 적극 권장해서 이제는 교육정책에 시민이 참여하게끔 교수가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컨대 통제수단의 하나로 교수계약제 연봉제 시행을 중지하고 대학교수의 연구를 독려하고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교수협의회를 법제화함으로써 대학내 민주화를 도모해서 창조성을 높여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논의를 주장하다가 재임용에서 부당 탈락된 교수와 부당해직, 강제사직서를 제출한 교수의 재심사 후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재임용 탈락은 사실상 해고와 마찬가지로인데 여기에 대한 제도적인 보호가 없는 상황이며 이로 인하여 대학에서는 많은 교권의 유린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조금 더 현실감있는 이야기를 보태겠습니다.

제가 속한 대학도 상당한 수준의 대학입니다마는 저같은 사람을 징계하라는 결의를 교무위원회에서 할 정도다 이것이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현재 수준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신 데서 제 생각을 조금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7페이지 참고자료 '가'의 '집중지원과 균형지원의 문제'에서 '2,000억원 지원사업은 기존 1조 3,000억원에 대한 지원예산에 새로 추가된 신규사업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신규로 추가된 것이 아니라 1,200억원을 삭감해 가지고 2,000억원으로 만든 것을 봅니다. 이것은 98년하고 대비를 해서 숫자관계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확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을 조금 넘겨서 죄송합니다.

○委員長 咸鍾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張水榮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述人 張水榮 흔히들 우리나라 교육을 좀 비하하는 경향이 많은데 사실 그 동안 국가의 많은 지원을 받지 않고도 사실 우리나라 대학들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은 흔히들 우리가 듣는 우리나라 대학은 세계에서 800등도 안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93년 정도에는 우리나라의 국제과학 논문수가 불과 한 3,000편밖에 안 되었지만 지금은 1만편을 이미 넘어섰고 숫자의 증가율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만 정부에서 지원해주면 우리나라 대학들이 크게 발전하고 연구역량도 많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해서 이런 BK21 같은 사업은 이미 10년 전에 시작되었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BK21사업의 긍정적인 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학원의 문호개방입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자교의 학사과정 출신들을 대학원에 입학시키고 타 대학 출신의 합격률이 매우 낮은 상태로서 동종번식을 계속하여 학문적 우물안개구리를 만들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사업이 채택이 되면 타 대학 학사과정 출신을 50% 이상 받도록 한 것은 대단히 잘 한 일입니다.

둘째 대학의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총 사업비의 10%를 여기에 배정한 점도 잘 한 일이라고 봅니다.

셋째 대학원생 재정지원비가 포함되어 이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1년에 박사과정 720만원, 석사과정 480만원을 받게 된 점입니다. 실지로 대학원에서 전일제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와 같은 재정지원을 받아야 대학원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넷째 대학원생의 장기해외연수도 지원되는 점입니다. 실지로 미국의 이공계대학 박사과정 학생들은 대부분 조교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연구조교수당이거나 아니면 교육조교수당을 받고 등록금은 면제되어서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박사과정학생들이 원칙적으로 조수로 임용되어 월 5,000마르크 정도의 봉급을 받고 교수의 연구를 보조하고 자신의 박사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박사과정 학생들은 대부분 3년간 펠로우쉽(Fellowship)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연구비 배분방식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연구비를 가장 많이 지급하는 기관은 국립보건원인데 98년 예산은 무려 125억불이고 97년 예산이 112억불인데 그 112억중에서 8억불은 자기네가 직접 쓰고 104억불은 대학, 연구소, 병원, 기업체 등에게 배정을 합니다. 그 내역이 표1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혜택을 받은 곳은 무려 2,262군데인데 그중에 470개 대학이 73%를 차지하

였고 특히 상위 25개 대학이 그중에서 47.8%를 받았고 상위 50개 대학을 합치면 무려 73%에 가까운 연구비를 받았습니니다.

특히 국립보건원의 연구비는 의학과 생명과학에 대한 연구비고 따라서 의과대학을 가진 대학들이 많은 연구비를 받고 있는데 거기를 보시면 제일 많이 받은 대학은 존스 홉킨스대학으로서 거의 3억불에 해당됩니다. 한 대학이 한 기관에서 받은 연구비가 무려 3억불입니다. 우리는 지금 1년에 2,000억 가지고 이런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바로 스탠포드대학이 1억6,700만불 받았는데 바로 그것이 2,000억입니다. 그러니까 스탠포드대학 하나가 미국의 국립보건원에서 받은 연구비가 지금 우리나라가 BK21사업을 통해서 대학에 나누어 주려고 하는 전체 액수와 같습니다.

또한 미국은 연구중심대학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가 하면 물론 이것은 정부가 구분한 것이 아니라 카네기재단에서 구분하고 있는데 연구중심대학Ⅰ은 연간 50명 이상의 박사학위를 수여하며 연방정부 연구비를 4,000만불 이상을 획득하는 대학으로 미국에 88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중심대학Ⅱ는 연방정부 연구비 1,550만불 이상에서 4,000만불 미만을 받는 대학으로서 37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중심대학으로 구분된 대학이 전체 2,300여개 중에서 약 125개가 있습니다. 그외에 박사학위 수여대학이라고 구분을 받는 대학이 113개가 있어서 결국 238개 대학이 실지로 박사학위를 주고 있습니다. 2,300개중에서 약 10%만이 학위를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급된 연구비는 교수인건비, 대학원생 장학금 외에도 통상적인 연구비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일대학에는 무려 712명의 연구교수가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연방정부의 연구비에서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봉급 자체가 연방정부 연구비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들은 소위 정년보장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국립보건원 다음으로 연구비를 많이 지급하는 기관이 국립과학재단입니다. 우리의 과학재단에 해당하는데 거기에서 작년도 예산은 31억 8,800만불이었습니다. 그외에 국방부, NASA, 에너지부 등에서도 대학에 연구비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미국에서도 연구비를 받는 분야는 의학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자연과학, 공학, 농학 같은 분야이며 인문사회과학분야에는 그런

대규모 연구비 지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학 연구비의 90%가 연방정부에서 지원되는 것이고 우리가 흔히 아는 것 처럼 산업체에서 많은 연구비를 주기 때문에 미국 대학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체 지원 연구비는 불과 한 10%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BK21사업의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00억중에서 500억 정도를 지역우수대학 육성자금으로 배정해서 지방의 대학들은 학사과정 교육에 충실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예와 같이 모든 대학이 연구중심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런데 실지로 우리나라의 지방대학들은 서울 소재 대학들보다 연구업적에 있어서 오히려 앞서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과학인용잡지 SCI논문 200편 이상을 발표한 우리나라 대학 12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서울 소재 대학은 5개 뿐이고 7개가 지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12개 대학의 SCI논문수를 다 합쳐 보니까 한국 전체 1만1,514편의 절반에 달합니다. 결국 상위 12개 대학이 우리나라 논문 전체의 반을 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대학원 교수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교수는 학사과정부터 박사과정까지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업에서는 사업단장과 각 분야의 책임자는 학사과정 교육은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학사과정 강의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연구를 잘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는 대학원생과 따로 하는 것이고 강의는 학부강의를 하든지 대학원강의를 하든지 그것을 통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BK21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학사과정 정원을 감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무조건 획일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을 감안해서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분야는 감축하고 그 반대인 분야는 증원은 못하더라도 적어도 감축은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표2를 보시면 우리나라와 일본과 독일과 미국 네 개 나라의 각 분야의 공학사, 공학박사, 공학석사의 숫자를 1년에 배출하는 숫자를 써놓았습니다. 우선 전체만 보시면 우리나라는 1년에 공학사가 4만7,361명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세 배나 되는 일본은 10만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우리보다 인구가 여섯 배 인데도 6만2,000여명밖에 안됩니다. 이만큼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공학사가 적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어떤 분야는 오히려 예를 들어 조선과학 같은 것은 미국이나 일본보다 오히려 더 많은 학사를 내고 있고 광산도 그렇고 재료금속 같은 데도 일본이나 미국보다 엄청난 숫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가장 수요가 많은 전기전자공학이나 컴퓨터나 또는 기계공학 같은 데서는 인구비례로 볼 때 우리가 숫자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해서 무조건 획일적으로 인원을 감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표3에 자연과학분야 졸업생 수를 보게 되면 좀더 놀라운 사실들이 알려집니다. 예를 들어 수학과 통계학에서는 절대적인 숫자가 우리나라의 학사학위가 일본과 거의 비슷한, 우리는 4,180명, 일본이 5,100명 이와 같은 많은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리학도 우리가 2,700명에 일본이 4,000 화학은 3,100에 일본이 3,600, 생명과학은 우리가 거의 일본에 두 배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좀 알아서 인원이 너무 많은 데는 당연히 줄여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수요가 많은 데는 무조건 감축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BK21사업의 지원금은 주로 대학원생과 Post Doc의 인건비이고 연구비는 별도로 다른 기관에서 받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현재 각 대학이 여러 기업체에 협약서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엄청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일부의 연구비를 외부에서 받아 오게 하는 것은 좋지만 이와 같은 외부 연구비를 의무적으로 그것도 퍼센테이지가 너무 높은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사업단의 규모를 분야에 따라서 50명, 30명, 20명으로 함으로써 2개 대학이 연합해서 사업신청을 하게 한 것은 역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기준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 규모가 작아도 우수한 프린스턴대학이나 칼텍 같은 대학도 신청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대학은 작은 대학대로 큰 대학은 큰 대학대로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2,000억원의 25% 정도를 특정대학의 기숙사와 도서관 등의 연구기반시설에 투자하겠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현재 많은 교수들이 이 사업에

반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2,000억원의 사업비가 배정된다면 전국에서 약 10여개 대학은 앞으로 10년내에 많은 연구업적을 내고 우수한 대학원생들을 배출해서 우리나라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들을 많이 고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李在潤 교수님 말씀하신 중에 나중에 우리 金容炫 국장께서 답변하실 부분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韓民九 한국학술진흥재단 사무총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述人 韓民九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사무총장인 韓民九입니다.

저는 지난 2월까지 서울대학교에서 교수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회에서 우리 나라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두뇌한국21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학술진흥재단 입장뿐만 아니라 교수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사업을 기획하고 평가하면서 저는 교수로서 깊은 자성과 성찰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나라의 여러 부분을 반영해 볼 때 반도체산업이라든지 조선산업, 섬유산업 등은 이미 세계에서 1등, 2등을 다투고 있고 또 5위권에 들어가는 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1등이나 2등을 하지 않으면 그 산업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대학의 수준은 과연 민간기업의 수준처럼 되어 있는냐?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물론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우리의 문화적 정서를 고려하더라도 대학의 경쟁력이랄까 대학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교수로서 깊은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4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1세기는 정보화 사회, 지식기반 사회라는 점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에서 인적자원이 가장 중요한 우리 재산이 됩니다. 종래에는 땅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자본 이런 유형의 재산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제는 사람 스스

로가 우리 사회를 바꾸어 갑니다.

미국의 경우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보면 빌 게이츠라든지 몇 명의 소수적 창의적 집단이 갖고 있는 그 회사의 총 상장주식이 우리 나라 전체 주식의 2배, 3배가 된다는 점을 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력양성을 효율적으로 하느냐 하는 면이 이 브레인코리아 사업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학원 사업 또 학사과정을 내실화 하는 지역우수대학사업 또 특화사업 등 여러 가지의 사업을 저희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표에서 초점은 타부처사업과 다른 것이 연구비의 지원이 아니라 인재를 양성하면서 동시에 제도개선 결과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개선해 갈 것이냐? 우리 대학 스스로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이 사업의 특징이면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으로서 우리 학생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인건비를 제공하자. 현재 우리 대학원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다른 데 가서 일을 하면서 전일제 대학원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바꾸어 줄 것이냐? 또 결혼한 대학원생들도 어떻게 적절한 생계보조를 해서 이 학생들이 창의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것이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학생들을 지원하면서 이 분야를 선택할 때 조금 전에 張水榮 총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학협동을 통해서 이 교육이 공급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교육을 좀 수요와 연결시켜야 되겠다. 우리 교육 스스로가 어떤 면에서 교수님 중심으로 학계에 장벽을 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여러 사람을 배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위를 따고서도 현재 직장을 못 얻어서 시간강사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사회적 문제화가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인력수급의 왜곡현상을 좀 없애자 따라서 우리가 수요가 있는 분야 즉 지역사회에서 수요가 있는 분야를 우선 골라 보자 그래서 지방자치체와 긴밀히 연계해서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분야를 만들어 보자 이런 분야를 교육부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지역우수대학의 핵심입니다.

또한 지역우수대학은 학사과정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학원 프로그램을 그대로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대학원도 지원하지만 우선 분명히 지원하자 하는 것은 지역과 연계된 학사과정은 분명히 돈을 준다, 거의 경쟁이 없이 지역내 경쟁으로 둔다, 이런 것을 큰 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의 기대효과는 적정한 분야를 선택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인재를 효율적으로 공급하자 해서 저희가 1년에 한 2,000명 정도의 고급인력을 만들자. 이 분야는 이미 산업체에서 수요가 입증이 되고 이것은 또 대응자금이 논란이 있습니다만 전체예산의 10%에서 15% 정도를 민간에서 투자함으로써 민간과 대학이 같이 일을 해서 그 분야를 잘 개척해 보자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보겠습니다.

또 해외연수나 이런 것은 중언부언이 되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대학의 박사과정 이후의 연수생과 계약교수를 채용함으로써 신진연구인력을 흡수해서 요즘의 어려운 점을 타파해보자. 또 우리나라의 많은 인력이 지금 해외로 빠지고 있습니다. 반도체나 소프트웨어 분야는 외국에서 10만불씩을 주고 스카우트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국내에 붙잡아두어서 국내 산업계와 학계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하자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체의 산학협력강화로서 교육에서 공급자교육이 아니라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을 한번 해보자. 즉 교과과정도 교수님들의 지적 호기심을 만족해주는 교과과정은 물론 동시에 수요자들이 원하는 교과과정 그리고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교과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학의 개혁을 해보자. 우리의 입시제도 또 대학원입시제도는 경직되어 가지고 본교출신만 진학되는 폐쇄적인 구도를 여기서 바꾸어 보자. 그렇게 해서 초·중등교육의 정상화와 대학교육을 정상화 해보자. 우리 나라 대학처럼 학생들이 MT 가고 휴강이 잦고 학생들이 수학여행 다니고 이래 가지고, 선진국은 밤을 새서 공부하는데 우리의 대학원 교육을 정상화하면 대학교육도 파행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44쪽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많은 교수님들이 반대하는 것이 크게 몇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는 교수님들의 업적평가인데 그 업적은 모든 대학이 아니라 이 BK사업에 선정되는 분들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평가를 받는 사람은 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저 스스로도 평가를 받으면 뭐가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공무원도 평가를 받습니다. 이미 국장급이 연봉제가 됐습니다. 민간기업은 임원들의 3분의 1을 구조조정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대학은 전혀 무풍지대로서 평가에서 벗어났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못하는 분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밤을 새서 묵묵히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을 어떻게 보상을 해 드릴까, 그 분들을 어떻게 지원할까가 평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수님들의 그 불안감이, 오해가 좀 불식됐으면 하는 것이 저 개인 소망입니다.

선택과 집중문제는 이제는 저희가 우리 나라의 특화분야 우리 나라에서 1등을 할 수 있는 분야를 골라야 됩니다. 모든 분야를 다 지원했을 때 한 학과에 1,000만원 정도 내외의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갖고는 하향평준화 밖에 안될 것입니다.

선택을 잘 해서 공개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 분들의 결과를 웹사이트에 넣어서 그 결과가 전국에 공유되어서 산업체에 파급효과가 되는 선택과 집중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뿐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Center for Excellence나 이런 개념에서 저희들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원위원회에서는 선진국의 규정을 많이 보고 선진국을 봐서 45쪽을 보시면 이미 일본의 탁월한 연구거점사업, 미국의 대학원중심 연구거점사업, 대만의 대학학술 탁월 발전계획, 중국의 211공정이라고 중국처럼 방대한 나라에서 몇 개의 대학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평성을 따질 때 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학술진흥재단이나 다른 사업으로 약 1,000억 정도의 자금이 개인, 누구나 개인베이스로 경쟁을 해서 탈 수 있는 연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업적이 적으신 분들은 기회는 굉장히 적을 수 있지만 결국 우리 시대가 6만 명의 교수님들을 다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잠재력을 평가해서 균등지원을 할 전략을 교육부에

서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46쪽을 봐주시면 소규모 사립대학에 대한 개인 연구자에 대한 지원이 취약하다는 지적은 참 저희 예산상에도 아쉽습니다만 이 부분에서도 충분한 예산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좀더 투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다음에 지방국립대와 대학원의 문제입니다.

지방국립대는 학사과정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독립적인 지원을 해드리고 동시에 이 지방국립대학에서 한 분야만 대학원 과정이 되니까 다른 분야는 자유스럽게 대학원에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경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국립대의 불이익은 많이 해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덧붙일 말씀은 우리가 지금 세계를 상대로 경쟁을 하는데 서울이나 지방이나, 국립이나 사립이나 하는 이런 칸막이적인 소모적인 논쟁이 우리가 국제화되고 세계화될 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저는 참 아쉽게 생각하는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 특성을 살린 지자체와 결합문제는 충분히 고려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7쪽에서 두뇌한국사업이 대학의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논리가 많습니다. 사실 서열화는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신문에서 다 서열화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오히려 이 사업이 저는 서열화를 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학원중심, 학사중심에서 공정한 경쟁이 되면서 막연한 Name Value의 대학평가가 아니라 실적평가가 된다고 봅니다. 이미 저희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공정한 평가가 업적중심으로 되어서 어떤 분야는 어떤 대학의 누가 잘 하신다, 어떤 분야는 어떤 대학이 잘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더 공개화 되고 확산화가 되면 대학서열화가 아니라 탁월성이 평가가 된다고 생각해서 서열화문제는 오히려 없어질 것이다. 또 수학능력 위주의 평가가 아니라 추천입학제도의 대학입시의 과감한 개혁을 통해서 좀더 보편타당한 서열화가 정리가 될 것으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48페이지 보겠습니다.

의사결정과정과 심사과정의 공정성에 관해서는 이 사업을 하면서 여러 번 공청회를 했고 각 대학의 보직교수님께 충분한 사전설명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6만명 교수님께 일일이 설명은 못했지

만 충분한 사전고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의사결정과정은 비교적 공개되어 있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심사과정은 이것은 공개적으로 심사를 한다.

다만 너무 많은 교수님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배제하고 하다 보니까 산업계 전문가 또 연구소의 전문가, 해외전문가를 활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내학계에서도 참여해야 되지만 학계분들이 대부분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학부정원 문제는 저희들이 교육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사실 교수 대 학생들이 너무 열악합니다. 따라서 몇 개 분야에 신축성 있는 학부정원을 이룸으로써 오히려 입시과열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입시모집의 광역화, 지금은 1학년 때부터 과를 정해서 가는데 지금 연세대와 고려대학이 획기적으로 하고 있는 6개 계열화, 공학계 계열 사실 저도 대학에 있습니다마는 기계설계학과다, 기계학과다, 정밀기계과다 참 차이점을 밖에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나라 미생물학과, 생물학과, 분자생물학과 이런 폐쇄적이고 칸막이한 것을 이번에 좀 풀어보자 그렇게 해서 입시가 오히려 더 전향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끝으로 마무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하향평준화를 할 수 없다. 결국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것으로 볼 때 교육부에서 이것은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다. 아마 교육부에서 또 우리 국회에서 작년에 동의를 안해주셨으면 이런 사업은 출범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학사회가 조용해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안하고 지원도 없이 조용해지는 것이 좋으나? 조금 논란도 하고 시끌벅적하면서 최선의 길을 찾아가는 이 불가피한 정책수단을 선택과 집중, 경쟁, 평가, 업적관리의 강화 등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대학도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좀더 전향적으로 세계 무대에 우리가 서서 대학 스스로가 세계에서 100등이다, 200등이다, 800등이다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대학 스스로의 개혁이 가속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학술진흥재단의 공직자뿐만 아니라 교수의 입장에서 진솔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보고 드릴 말씀은 이 2,000억은 사실 정부 전체예산으로 볼 때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가 80조 예산 할 때 2,000억입니다. 이 2,000억보다 예산이 좀더 많아야 되겠다.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통신, 한국전력에서 쓰는 연구개발비가 4,000억씩입니다. 4,000억을 한 기업에서 쓰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은 1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억을 갖고 대학을 바꾼다는 것이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2,000억 갖고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IMF의 어려운 처지에서 예산을 만들어 주신 것은 정말 감사드립니다만 예산의 획기적인 증가가 있어서 많은 대학이 참여할 수 있고 선택과 집중도 좀더 강화될 수 있으며 동시에 여러 대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집중적인 지원이 좀더 간절히 요망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委員長 咸鍾漢 韓民九 교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黃元杰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咸鍾漢위원장, 李源馥간사와 사회교대)

○陳述人 黃元杰 전남대학교 黃元杰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진술하게 된 것은 아마 제 추측으로는 지역우수대학사업과 비슷한 국책공과대학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단장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요청을 받지 않았는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공학교육 현장에서 지내온 자로서 우리 대학을 대표할 수도 없고 순전히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지만 BK21과 같은 장기적인 교육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BK21은 제가 보기에는 경쟁과 보상을 통해서 대학의 연구와 교육분야의 전문화체제를 구축하려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즉 연구력 증강에 중점을 둔 세계수준의 대학원과 학사과정 내실화에 역점을 둔 지역우수대학을 연계하여 향후 지식기반국가로 발전을 주도할 미래학자 양성체제를 제도화하겠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BK21사업이 확정 공고되자 여러 가지 우려의 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첫째 교육과 연구의 양분화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다음에 만약 이 기간, 7년 후에는 정말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원 또는 학교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우려의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가 거론되었든지 간에 어쨌

든 지금 우리 대학교육이 그다지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만큼 이러한 목소리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제가 국책공대사업을 추진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 의견을 한 번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과 연구의 양분화 현상 즉 세계수준의 대학원 육성사업은 연구 위주로 흘러갈 것이고 지역우수대학 육성사업은 교육위주로 추진됨에 따라 대학원 교육이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에 대해서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국책공대사업은 전형적인 학부중심의 교육위주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과 교수님들이 가장 아쉬워했던 점들이 바로 이런 점들이었습니다. 즉 교육기자재를 구입하고 학생들 장학활동에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고 연구사업비에는 전연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 가지고 완전히 교육위주의 사업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이제 5년이 지나가서 국책공대사업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5년이 지났을 때 총 결과를 봤을 때 이 사업폭이 특성화사업의 추진체제였던 학부성장 못지 않게 대학원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즉 학부생이 직접적인 혜택의 주대상이었으나 해당 사업분야에 속한 대학원생들도 직·간접적으로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교수보조자로서 각종 역할분담과 함께 많은 수혜를 받았습니다. 즉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수한 인재를 적재적소에서 활용함으로써 교수들의 연구활동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학부중심 교육사업이 반드시 대학원 교육의 위축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느끼는 바입니다.

즉 지역우수대학사업이 교육중심대학으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대학원도 또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 사업이 7년 동안을 예정하고 있는데 7년 후에는 과연 세계수준의 대학원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 교육사업에서는 7년은 너무 짧다고 봅니다. 차라리 기간을 좀 늘려야 하지 않겠느냐? 제가 느낀 바로는 지원액수보다는 기간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액수라도 적게 나누어서 더 오래 주는 것이 더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의 단적인 증거가 경북대라든가 부산대가 올해 연구중심대학으로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15년 가까이 한 분야에 계속 투자해 가지고 전력투구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참 교육중심대학이라고보다도 연구중심대학으로 나가자 하는 그런 움직임을 저는 듣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기간이 더 필요하다면 물론 더 늘려야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엄정한 관리를 통해서 실적이 미달되면 가차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 대상 또한 과감히 교체하여 진정으로 노력하는 대학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평가제도를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논의는 사업의 추진원칙을 살펴본 후에 원칙에 대한 검증은 거쳐서 만약에 이 원칙이 옳다면 이것을 시행할 수 있는 타당한 방법을 한번 모색하여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BK21사업의 원칙은 네 가지의 원칙을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선택과 집중의 원칙 다음에 창의적 학문후속세대 양성 셋째 재정지원과 대학개혁의 연계 마지막으로 지식기반의 균형발전 네 가지 추진원칙입니다.

먼저 선택과 집중 원칙입니다.

이것은 국가경쟁력에 직결되고 국제적 비교우위 확보가 가능한 과학 기술 전략분야와 산업의 고부가가치와 직접 연계되는 특화분야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것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특정 몇 개 분야만 집중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이 있는 분야를 골라서 집중육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대학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정책적으로 집중육성해야 하고 이러한 분야가 없다면 국가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과연 이러한 분야가 어떠한 분야가 되는지 이러한 것은 논의가 되어야 하지만 이 원칙 자체는 우리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원칙도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기초학문의 저변화가 먼저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것이 맞는 말씀들인데요. 이것은 네번째에 있으니까 네번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창의적 학문후속세대 양성의 원칙입니다. 현직 교수지원이 아닌 대학원생 지원, 계약교수 인건비 등 창의적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중심으로 사업비를 투입한다는 원칙으로서 우리 다음 세

대를 위한 장기적 포석의 의미이니까 여기는 충분히 수긍할 만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재정지원과 대학개혁의 연계 원칙입니다. 교수 연구업적평가, 학사과정, 대학원 문호개방, 입시제도 등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가장 개개인의 관점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학의 구조조정이나 교수 연봉제 등 이러한 참 미묘한 문제를 이 사업과 너무 무리하게 연결시키지 않는 것이 이 사업의 최종 궁극적인 성공을 위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식기반의 균형발전 원칙입니다. 지역우수대학 학사과정 내실화로 수도권 중심주의 완화, 인문사회 대학원 육성사업, 학문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핵심분야 우수대학원 지원 및 기초학문 중심의 학술진흥 기반사업을 통한 전반적 강화사업입니다. 이 원칙도 이 투자액이 과연 적절하느냐 하는 문제는 있지만 이것은 어떤 교수님들 누구든지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원칙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원칙에서는 수긍할 만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바라보는 이 사업에서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육사업에 자립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책공대사업도 자립을 요구를 받았는데 교육사업에서 자립이라는 것은 너무 무리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제 사견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지역 우수대학사업의 경우 교수에 대한 혜택이 별로 고려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수는 사업주체로서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동참해야만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데 교수들에 대한 희생만 강요하고 이것에 대한 보상은 별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점은 좀 보완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 이 BK21사업이 병역특례를 확대 추진해서 우수학생을 유치하고자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물론 병역특례가 우수학생들을 유치하는데는 더 이상 좋은 방안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편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법을 쓰기보다는 교육·연구분야의 여건을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어떤 우수학생 유치방안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다음에 이 사업은 대학원사업은 서울이고 지역우수대학사업은 지방이라는 양분된 사고방식을 갖게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즉 교수와 연구의 양분화와도 같은 맥락에서 이

해되는 것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연구활동을 상당히 교수님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BK21사업이 그러한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이와 같은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갖지 않도록 사업의 전개과정에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적으로 200여개에 달하는 대학 가운데 소수대학에만 사업예산이 책정되도록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여러 대학이 경쟁체제를 갖추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이 현실속에서 잘 성장하도록 지역대학에도 최대한의 배려를 아끼지 않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BK21사업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마지막 문제는 아까 韓총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사업이 1년에 2,000억으로써 이와 같은 광범위한 교육사업으로서는 재원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쓰느냐보다도 교육부분에 투자되는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에 힘을 더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저의 부족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모든 것이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고 제도의 문제점은 실행과정에서 보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계획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계획수립을 위해서 오랜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는 목적이 분명하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가지고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즉시 보완·수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중심점만 잃지 않는다면 원만한 해결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내 자신보다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자세로 그들을 위한 최선의 길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의 직분에 충실하는 것만이 그 문제의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李源馥 黃元杰 교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黃漢植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陳述人 黃漢植 저는 부산대학교 교수로 있고 전국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국회 공청회 자리에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와 같은 국회 교육위원회 공청회의

기회가 주어진 것은 지난 6월15일 부산대학교가 주최하고 국교협과 사교련이 주관한 전국교수대회에서 1,000여명이 모여서 교수들의 목소리를 내고 그 때 咸鍾漢 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마는 그 결과 오늘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좀더 일찍 마련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꼭 전국교수대회를 해야만 이런 자리가 마련되는 것인가 하는 역설적인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육부의 정책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의 교수 1,000여명이 거리로 나오게 되고 또 BK21사업의 전면 백지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왜 이와 같은 요구를 하고 있는가, 교육부가 주장하는 대로 정말로 1,000여명의 대학교수들이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인가, 세계수준의 대학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교수들이 오해를 해서 그런 것인가, 자기 대학의 실리를 찾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 또 대학과 교수들의 집단이기주의때문인가, 저희는 기본적으로 한국대학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이 나라, 우리 사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BK21사업이 전면 개혁되어야 한다, 백지화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몇 분 진술인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교련 회장님과 저는 사회과학을 하는 분이고 나머지 분들은 자연과학을 하는 분들이시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 또 몇 분들은 직접 참여하신 분들,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대개 기술주의적인 접근을 하고 있고 정말로 이것이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는 반면에 어떤 부작용이 있다 하는 효과와 비용에 대한 분석은 교육부이든 어디든 이야기하지 않고 다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다고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작용과 관련시켜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런 분석이 없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대학의 자율화라든지 어떻게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대학의 민주주의의 문제, 이런 문제가 선행되지 않는데 이런 효율성과

기술주의가 과연 관철될 수 있겠느냐, 성공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대학의 민주주의,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라는 이런 관점이 결여되고 있지 않은가 원론적으로 그런 몇 가지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저희가 BK21사업에 대해서 전면 백지화시켜야 된다는 이유를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우선 BK21사업의 입안과정, 의견수렴과정, 집행과정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교육부의 일방적인 졸속주의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대학의 주체인 교수의 참여를 배제하고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관료주의적인 행정의 표본이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李在濶 회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BK21사업에 대한 공청회를 한 일이 없습니다. 설명회 몇 번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것이고 공청회를 한 사실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설명회라는 것도 일방적인 설명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5월29일 교육부가 발표를 한 이후에 5월31일과 6월2일 사이에 대구, 광주, 서울에서 2·3일 동안 일방적으로 설명회만 했습니다. 공청회라는 것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설명회해 가지고 들어주면 되고 안 들어주면 안 되고 그런 것뿐입니다.

두 번째로 6월4일날 사업신청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20일까지 사업신청 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달 반 동안에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사업신청보고서를 연구팀들은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이야기하고 새로운 2000년대를 이야기하고 대학정책의 근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한 달 반 동안 보고서를 만들어야 한다, 물론 그 이전에 준비과정은 3개월밖에 없었습니다. 이 나라 대학교육의 근간을 과연 이러한 졸속적인 방식을 통해가지고 해서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견수렴 부분에 있어서도 형식적인 의견수렴을 했지 실질적으로 의견수렴한 것은 없다, 저희 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나 사교련이나 단체에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장관 면담을 신청하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몇 차례 요구했지만 단 한 번의 회신도 응답도 없이 철저히 무시 당하고 수만 명의 대학교수들을 대표하고 있는 조직에서 한 번 만나자고 했는데 만나주지도 않는 이런 상황까지 와서 결국 전국교수대회가 열린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대학총장이라든지 일부 극소수의 자기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을 제외한 모든 대학교수들은 BK21사업에 대해서 전부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무서워서 눈치보여서 교육부에 잘못 보이면 어떻게 될까 싶어서 우리 대학에 조금 덜 떨어질까 싶어서 사실 전부 전전긍긍하면서 어거지로 끌려가고 있는 것이 객관적인 상황입니다.

오늘 제주도에서 188개 대학교육협의회 총장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대학교 총장들과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모두의 입장이 반대한다, 자연대·공대 학장들이 반대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만 빠지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교육발전5개년계획이 지난 3월11일에 발표되어가지고 한달 반 동안에 의견을 수렴하면서 교육발전5개년계획에 대한 여론을 수렴해서 확정을 하겠다 했는데 그 교육발전5개년계획의 일환이 BK21사업입니다. 그런데 교육발전5개년계획에 대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도 없고 어떻게 확정되었는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교육발전5개년계획에 토대를 두고 BK21사업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발전5개년계획이 확정된 것인지 아닌지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교육부가 하고 있는 방식은 교육의 주체인 대학교수들을 철저히 배제시키고 일방적으로 졸속적으로 주도해 온 것이다 하는 이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아까 많이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BK21사업의 핵심은 극소수 대학에 대한 특혜지원입니다. 특성화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선택과 집중의 원칙, 저희가 판단할 때 이것은 기본적으로 소수대학에 대한 특혜지원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특혜지원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그간에 가지고 있는 소수의 대학을 중심으로 한 서울대와 몇 개의 대학을 중심으로 한 독과점 구조, 그리고 수직적인 대학서열구조를 더욱더 고착시키는 것이다, 극히 부분적인 사실을 가지고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돈이 극소수의 대학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고 그리고 이제 대학의 구조 자체를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오고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우수대학에서 학부를 하고 그 다음에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 지역

에 있는 대학은 브레인이 있는 대학원 중심 대학에 종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자주적인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두 번째 문제점은 과거 그동안 한국 경제성장과정에서 재벌에 일방적인 특혜를 주어가지고 오늘날 그 재벌이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특혜, 독점, 집중 그것이 결국 이런 결과를 낳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중소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중산층이 몰락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종래의 개발독재식의 대학지원방식은 이제 통하지도 않고 구시대적인 방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미 우리 한국대학은 서열화되어 있고 독과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다수 대학들의 교수들과 학생들이 못나서 그런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방대와 사립대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못난 자들의 행진"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마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동안에 한국에서 서울대학을 정점으로 이루어졌던 대학의 서열화, 독과점화 구조가 어떻게 생성되었느냐, 왜 되었느냐 할 때 첫째 중앙집권주의적인 체제, 모든 기회와 정보의 서울 집중체제 그리고 학벌주의, 이런 조건하에서 다른 대학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애당초 봉쇄된 가운데 서열화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교육부의 특혜지원은 이와 같은 대학의 서열구조, 독과점구조를 보다 더 심화시키고 고착시키고 제도화시켜 나가고 구조화시켜 나가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의 학생 1인당 연간교육비를 보면 서울대학이 541만원, 국립대 평균 393만원, 포항공대와 과기대는 그보다 몇 배 더 나와 있습니다. 그 동안에 특혜지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디다. 세계적인 경쟁력, 이것이 가장 핵심인 것같은데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대학이 왜 안 되었느냐 하는 원인의 문제입니다. 돈을 많이 지원하지 않아서 그런가, 문제의 핵심은 저는 서울대학과 같은 대학을 대한민국에 여러 개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희들이 문제로 삼는 것은 경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체제

를 만들자 하는 것인데 BK21사업으로는 불공정한 경쟁을 강화시켜서 대학의 서열화와 독점화를 더욱더 심화시키는 것입니다.

(李源馥 간사, 咸鍾漢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결국 세계적인 경쟁력 있는 대학이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여담삼아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학술진흥재단이사장님께서 부산대학에 와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부산대학이 솔직히 얘기해서 서울대학따라갈 수 있나?'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방법이 없잖아? 따라 갈 수 있나?' 그랬습니다. 저는 방법이 간단하게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뭐냐? 서울대학을 부산에 갖다 놓고 부산대학을 서울에 갖다 놓으면 부산대학은 바로 대한민국 일류대학 된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저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또 대학과 사회의 서울 1급집중체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교육부의 정책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공정한 경쟁체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서울1급집중이 아니라 분산체제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교육정책이 가야 할 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BK21은 결국 명문대학원을 졸업하는 것이 현재 일류대학을 졸업하는 것 이상의 특권의식을 갖게 될 것이고 우리 사회에 그토록 문제가 되는 학벌주의를 더욱더 강화할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점입니다.

BK21은 서울집중과 지역종속을 심화시키는 것입니다. BK21의 핵심은 잘 아시다시피 세계수준의 대학원중심대학하고 지역우수대학육성입니다. 그러나 돈의 액수면에서도 그렇고 아까 지역고등학교, 지역우수대학, 대학원중심대학이나 이런 소위 대학의 진학구조가 수직적인 구조입니다마는 그래서 이 두 가지, 결국 세계수준의 대학원중심대학과 지역우수대학인데 지역우수대학이라는 것은 대학원중심대학의 들러리이고 주변에 불과한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대학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거나 또는 돈의 금액을 가지고 보거나 문제의 핵심은 그런 것입니다. 대학원중심대학에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소 들러리라도 만드는 것이 지역우수대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것도 그 지역 산업수요의 적합한 분야에 학사과정에 국한

해서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도권 대학과 지역대학 사이의 격차를 더욱 넓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대학을 육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와 연구자 양성은 서울의 일부 대학에서 할테니까 지역대학은 지역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학부교육이나 해라'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지역대학이 가지고 있는 연구기능, 연구자양성기능을 죽이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BK21이 강행될 경우 지역에 있는 대학의 대학원은 자구노력을 해서 지금 대학원이 평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그나마 지역의 대학원은 붕괴되고 말 것이고 따라서 대학원만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학부도 붕괴될 것이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학원중심대학이 서울에 있고 그래서 우수한 학생들이 서울로 누출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수한 학생이 없는 곳에 우수한 교수의 연구가 가능하지 않고 우수한 교수의 연구의 퀄리티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 그 교수가 제대로 된 강의와 제대로 된 교육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 학부도 같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BK21은 단순히 대학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구와 교육을 분리시킴으로 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학부와 대학원을 동시에 붕괴시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몇 년 전 얘기입니다마는 동일한 목적의 국제대학원을 설치했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원한 것이었습니다. 9개 국제대학원을 모든 지역에서 신청했습니다마는 9개 국제대학을 전부 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대학 혹은 한국사회의 지역문제로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9개나 주니까 결국은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그 성과는 실패하고 있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최대의 문제는 계층간의 갈등하고 지역간의 갈등문제입니다. 지역문제입니다. 지역문제의 핵심은 서울지역과 비서울지역간의 격차와 불균형입니다. 지역간의 불균형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최대의 지역문제인데 그 지역간의 불균형문제에 결정적으로 역행하는 것이 BK21이고 그리고 두뇌가 없는 지역, 두뇌양성권을 빼앗긴 지역이 어떻게 해서 지역의 발전을 할 것인가?

이것은 세계화의 시대, 지방화시대, 지역발전, 지방자치에 철저히 역행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아까 평가기준을 굉장히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외국대학교수들도 참여시키고 산업체도 참여시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심사기능을 갖는 기획조정위원회의 구성비율에서 외국학계 4, 국내산업계 3, 학계인사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K21은 외국인의 참여를 전제로 한 사업계획입니다. 학문의 대외종속, 우리는 개방적인 입장을 가져야 하지만 우리는 대등한 입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점으로 이제까지 말씀드린 모든 문제는 결국 관료, 교육부에 의해서 대학과 학문이 통제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고 그 통제를 심화시키는 것이다, BK21의 그 핵심은 대학사회와 교수사회를 통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통제와 관련해서 지금 교육부는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니까 계속 조건을 완화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인사제도와 연결시키는 문제, 연봉제·계약제와 연계시키는 문제, 특별회계제도를 통해서 종래의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까지 교육부 통제로 가져가고 대학운영시스템도 직선제를 없애고 그리고 대학이사회제도를 도입해서 교직원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를 시키는 이런 교육부의 기본적인 구도와 연관되어서 지금 이 BK21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어서 교육부의 통제로부터 대학의 자율화,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안을 말씀드리면 우선 첫째로 BK21은 전면적으로 백지화되어야 된다. 그리고 7월2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장 사업신청공모를 즉각 중단하여야 됩니다. 이처럼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7월8일날 전국교수대회가 있는데 그래도 강행을 하려고 할 것이냐? 일단 전면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부분적으로 땀질하고 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형태를 유지할 것이 아니라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교육부와 그리고 교수회의대표기구인 국·공립대학교교수협의회, 사립대학교수협의회 등 교수대표기구와 그리고 집행부인 총장이 같이 3자가 협의회를 만들어서 논의를 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노사정협의회는 이미 그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분에서 그런 것이 없으란 법 있습

니까?

저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조속히 요청을 했지만 단 한번의 대답도 없었으므로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세 번째로는 결국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관료주의적인 행정, 대학정책이, 브레인육성정책이 관료주의에 의해서 이렇게 입안되고 집행되어 가지고는 안되겠다. 적어도 학문정책은 교수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독립적인 대통령직속의 고등교육위원회 혹은 대학정책위원회 그런 것을 신설해서 정말 백년대계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육정책이 수립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대학원중심대학부분과 지역우수대학육성을 별도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발전적으로 통합해서 전국의 몇 개의 지역 권역별로 나누어서 역내의 연구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오늘 이런 공청회자리가 열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님들 여러분께서 오늘 현재 모든 대학인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좋은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지도력을 발휘하셔서 이 나라 대학과 사회를 바로 세우는데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咸鍾漢 황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하겠습니다.

○李在五委員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李在五 위원 말씀하세요.

○李在五委員 오늘 교육부로 보서는 상당히 중요한 정책이나 설명회인데 보니까 국장밖에 안 나왔어요. 물론 꼭 나와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공청회에 장관이나 차관이나 또 예산담당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왜 안 나왔지요? 장·차관이 왜 안 나왔어요?

○委員長 咸鍾漢 이 공청회는 오늘 진술인으로 국장이 나와서 진술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이 나오신 것이고 장관께서는 아마 제주도 전국총장회의에 가셨을 것입니다.

○李在五委員 절차는 알겠는데 차관은 왜 안 나왔어요?

○委員長 咸鍾漢 차관은 지켜야 될 터이고……

○李在五委員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진술이지만 좀 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이런 것은 장관님이 없으면 차관이 나와서 좀 들어 보게 해야 하

는 것 아닙니까?

○朴範珍委員 듣는 것은 우리가 듣는 것이지요.

○李在五委員 우리도 듣는데 장·차관중에 장관이 없으면 차관이라도 나와서 들어 보고 정책을 수정하거나 다시 하거나 하는데 있어서 참고를 해야지 담당대학국장만 달랑 나와가지고…… 정회시간 도중에 차관이라도 나올 수 있으면 위원들이 질문과정이나 이런 것을 들어 보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나는 그것이 옳다고 보는데요.

○委員長 咸鍾漢 그런데 이 공청회의 주체가 우리 교육위원회이고 우리가 요구한 사람이 진술인으로 이 분야의 진술인이 국장이기 때문에 국장을 저희들이 모셨는데 잠시 정회하는 시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委員長 咸鍾漢 공청회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李在五 위원께서 교육부차관 참석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아마 행사에 참석해서 교육부에도 부재중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고등교육지원국장이 오늘이 사항을 상세히 보고하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답변을 원하는 진술인을 지목하셔서 5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朴承國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承國委員 먼저 교육부의 국장님 그리고 각 대학의 교수님들,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정책입안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문제가 수도권외의 비대입니다. 교육부 정책도 우리나라의 정책입니다. 이제 그만 인구집중을 안 하도록 어떻게든지 해서 지방도 살리는 정책을 써야 되는데 무조건 중앙정부에만 오면 서울을 키우는 일에 일조를 하니깐 대한민국이 어디 서울 대한민국이요? 지방도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고요. 그런 근본적인 국가관을 가진 사람들이 정책을 펴야 됩니다.

지금 수도권에 대학이 72개고 지방이 116개입니다. 또 학생수가 수도권이 58만이고 지방이 89만입니다. 교수도 수도권이 1만6,000 지방이 2만 3,000입니다. 이렇게 지방에서도 많은 교수를 가지고 학생들도 많고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데 뭐든지 입

안하면 전부 서울중심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 번 예산서를 가지고 검토를 해 보고 있는데 대학에 2,000억 이외에도 지금 대학원 중심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170억, 1,000억 짜리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또 아까 누가 말씀했지만 국제전문대학원 해서 또 1,000억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약방의 감초식으로 고려 대학, 서울대학, 연세대, 포항공대, 한양대 이것은 국제전문인력 양성에 돈 따가고 또 대학원 중심 지원대학에서도 가져가고 그 다음 이번에 2,000억 나오는데도 가져가고 그러니까 자꾸 그 학교만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과감하게 우리가 국가 정책을 전국 균형을 잡아서 배정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학교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까 누가 말씀하셨지만 서울 대학이 광주 썸 가 있으면 아마 광주가 굉장할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그런 발상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자꾸 서울에 놔두고 이렇게 키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서울이 비대해지고 인구가 집중되고 또 교통지옥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이것이에요. 교육에서는 생각할 문제가 아닌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으로서는 안보문제도 큰 일입니다. 서울을 이렇게 비대시켜서 어떻게 안보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정부는 적어도 함께 논의해서 교육개혁도 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이 굉장히 황폐화되고 있는데 이번에 과감하게 BK21의 2,000억을 몽땅 지방으로 돌릴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내가 묻고 싶어요. 오히려 지방대학을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해서, 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공기 좋고 물 좋고요. 그런데 가서 연구하는데 연구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장래를 보나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 아까 포항공대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8년도 SCI논문 200편 이상 대학12개중에 7개 대학이 지방대학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울로 집중합니까? 그래서 일본도 교토대학이 소위 노벨상을 넷이나 탔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동경을 중심으로 개발합니까? 그러니까 지방 교육을 더 우수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우리 국가에서는 절실한 제도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우수한 지방학생들이 되어야 균형발전이 됩니다. 좀 안다고 하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

들은 전부 서울로 다 와요. 지방은 누가 키워줍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더라도 이번 BK21사업은 지방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방이 발전하는 길이 곧 국가가 발전하는 길이고 또 앞으로 고등학생들도 그 지역에서 보따리 싸가지고 서울로 올라오지 말아야 됩니다. 전부 서울로 올라오는데 아마 BK21로 해서 대학원중심 대학이 각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도 서울로 안 올라 올 것입니다.

원천적으로 지방에도 두뇌를 키워야 될 시점이고 또 꼭 BK21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서울에서 보따리를 싸서 지방대학원으로 갈 수 있도록 이런 과감한 정책이 우리나라 종합발전을 시키는데 대단히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어요.

그 다음에 아까 어느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소위 교수협의회나 어떤 단체가 왔는데 장관이 안 만나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국회의원이지만 유치원 선생이라도 오면 만납니다. 만나 가지고 대화를 해서 그 사람들의 뜻을 받아들여야지요. 그러니까 안 만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립대학은 아까 자율화 개념에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사립대학 문제는 될 수 있는 대로 정부가 터치를 안 하도록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입시라든가 등록금이라든가 교수임용이라든가 학생수라든가 학과 증설 이런 것을 왜 교육부에서 통제를 합니까? 스탠포드나 옥스퍼드나 하버드가 통제를 해가지고 그렇게 컸습니까? 그것은 대학을 자유롭게 가만히 놓아두어야 되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아서도 사립학교에 돈 몇 푼 주고 유인하고 길들이는 이러한 방식의 교육정책은 앞으로 지양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감사합니다.

우리 박위원님 질의는 金容炫 국장이 모두 답변해 주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薛勳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薛勳委員 오늘 진술인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입장들이 서로 다르고 따라서 착잡합니다. 결국 BK21사업을 하자라는 것이 우리 대학이 대학원 교육을 강화시켜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해내자 이런 뜻이 담겨있는데 서로 입장을 달리 해가지고 논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솔직히 말씀

드러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지 참 난감한 생각이 앞섭니다.

교육부가 의지는 좋았지만 이것을 단기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좀더 중장기적으로 문제를 보고 판단했으면 이런 갈등들이 적었지 않겠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교육부가 우선 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또 현재 우리 나라의 대학 현실로 볼 때 몇 개 대학을 중점적으로 육성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 부분이 이해가 갑니다. 반대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대학을 서열화 시키고 또 서울에 집중시키고 지역을 소외시킨다 이래서 반대를 하고 계시는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던 우리 대학에 대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반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인이라면 누구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BK21사업을 성공시키되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런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자는데 대해서는 반대하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하되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방법상의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되어야 하는 것은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BK21사업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에 중점을 두어서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집중 육성 이런 목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간과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통해서 대학입학제도의 근본적인 전환을 이루고 그로 인해서 초·중등학교의 정상화 이것이 또 목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혀 논의가 안되고 있고 그냥 아까 국장이 말씀하실 때 쏙 지나가는 얘기로 되고 만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육부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교장추천입학제 확대 실시 이런 것을 해가지고 대학입학제도를 개선해라 이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 다음에 2000년 입학할 때까지는 학부과정 학생수를 30% 줄여라 이것도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대학 출신에게 50% 이상 대학원 학생들

을 문호를 개방해라 이런 전제들을 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충족이 되면 실제로 대학입학제도의 근본적인 전환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냥 간과되어 버리고 대학을 집중육성하는 것으로만 보는 시각은 저는 BK21사업에 대한 목표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학원 집중육성도 필요하고 또 대학입학제도의 근본적인 전환 이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진술인들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한 반발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 들었듯이 1,000명 이상의 대학교수들이 모여 가지고 시위를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사상초유의 일입니다. 이런 부분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을 신중히 생각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공청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두 가지 목적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다면 이것은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처방을 내놓으면서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된다면 교육부에서 제가 아까 얘기한 교장추천입학제를 확대 실시하는 이런 등등으로 해서 대학입학전형제도를 개선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학사과정 학생수 30% 줄이는 문제 그리고 타대학 출신에게 50% 이상 대학원 개방하는 문제 이것이 확실히 되어야 된다는 보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대학이 과연 하려고 하느냐 제가 보건대 서울대학쪽에서 또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각 대학들이 하겠다는 말만하고 안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아까도 진술인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강력하게 조건을 달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주문들에 대해서 강력한 제동을 걸고 이것을 확실하게 하라는 조건들이 수용이 안되면 안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두 가지가 분명한데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을 해야지 이것이 안된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회의가 근본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이 세 가지 조건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그냥 별 것 아니니까 흘려버린다라고 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교육부의 분명한 입장을 좀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차 질문은 이것으로 끝내고 나중에 돌아오면 한번 더 하겠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薛 勳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源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馥委員 李源馥 위원입니다. 시간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상세한 나름대로의 얘기들은 제외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金容炫 국장께 좀 묻겠습니다.

정부가 이 정책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아주 졸속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밀실정책의 산물로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인정하시는지 앞서 장관이나 담당자들이 한 것에 대해서 치다꺼리, 말하자면 수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처음에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 서울대학이 서울대발전계획을 하면서 2,000억 공급 7년간 1조4,000억 프로젝트가 나왔다 말입니다. 그것하고 같이 겹쳤기 때문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오해랄까 문제랄까 이런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BK21사업에 있어서 최종 수혜대상 대학이 지금도 서울대학 중심체제인지 아니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상당한 다수 대학들이 수혜대상 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지 그 결과를 지금 예측해서 말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폭이 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원래 이 프로젝트는 작년도 정기국회 예산국회에서 국회 동의 없이는 사업시행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의결도 없이, 상임위원회에서의 토론도 없이, 상임위원회에서 아무런 검증절차도 없이 사업시행 공고가 발표되어 버렸습니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간담회를 정당간에 했다는데 언제 간담회 했습니까? 장관이 밥 한끼 먹자고 해서 밥 한번 먹은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것이 사적인 자리이지 무슨 간담회입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BK21 이것을 정부 원안대로 하면 과연 한국 대학교육의 질이 획기적으로 좋아집니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 가지고 대학교육의 질이 정상화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

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는 수도권이나 서울에서 하고 지역은 교육 중심이다 이런 이분법적인 틀이 이 안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구조가 근본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습니까? 지방은 무슨 교육만 하고 수도권이나 서울은 연구중심으로 하고 그런 사고방식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주도 같은데 얼마나 연구하기 좋습니까? 또 보니까 경기, 인천은 뺐습니다. 수도권에 근 1,000만명이 삽니다. 그나마 경기, 인천은 왜 뺐니까?

저는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 추진체들의 철학과 방법론이 대단히 거칠어 보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대학교육이라든가 대학원 교육 또는 고등교육의 질을 대단히 높여야 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떠한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고민의 흔적은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대단히 거칠고 졸속적이고 문제점 투성으로 보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金容炫 국장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서울대 權旭鉉 교수님께 몇 가지 질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인문사회대 교수들도 BK21에 대해서는 반대 또는 비판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반대하는 진정한 뜻은 어디 있다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참고로 답변해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에는 여러 가지 선결요건들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학 내부의 어떠한 제도적인 결함들,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죽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 여건들이 잘 해결되고 조성되어야만 BK21도 대단히 생산성 있게 효율성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것이 그렇게 하루 이틀에 쉽게 될까 그것이 BK21 문제가 아니라 BK21 문제보다도 선결적으로 이 나라의 고등교육이 해결되어야만 이것도 생산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선결요건들이 그렇게 쉽게 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교육부가 더 치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우리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정분야를 선정을 했는데 예를 들면 IT라든가 바이오테크라든가 기계, 재료, 화공, 물리, 화학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끄트머리에 등 해놓았기 때문

에 등등하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는 말이 있으니 융통성이 좀 있다고 해석될 지 모르겠습니다. 다마는 사실은 이제라도 하면 7개 분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다 문제 제기해서 그것도 박박 우겨 가지고 싸워서 한 두개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다마는 우리 나라에 특정분야, 경쟁력이 있는 분야가 이렇게 스테레오타입화 한 이 7개 분야밖에 없습니까?

이것은 權교수님께 질책하는 사항이 아니고 한 번 토론해 보았으면 싶은 것이 이런 것을 선정할 때 보면 대개 대단히 통념적이고 보수적인 선정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분야가 아닌 신중분야가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만화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의공학이라든가 교통공학이라든가 또는 첨단전자공학이라든가 많은 부분이 있을텐데 과연 이런 부분만 갖고 되는 것인지 그 점에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潤 교수님께 질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와 지역의 어떤 이분법적인 구분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만 조정된다면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전제한다면, 전국적으로 몇 개 대학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다마는 그래도 대충 10개에서 15개 또는 약 20개정도 대학원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조정되어 질 수 있다고 전제가 된다면 그래도 형평성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못 낀 대학들도 불만이 많겠습니다. 다 나누어준다는 것도 물리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것을 다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해줄 수만 있다면 이것을 안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하고 계시는지?

그래도 조정되어서 시행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또 그 전제조건은 일반대학이나 거기에 끼지 못한 일반 대학원 이런 데에 대해서 교육부의 다른 예산지원 시스템들이 보강되어 있는 전제하에서입니다. 그런 것이 다 일반적으로 나누어져 있으면서 그래도 플러스 알파로 이런 특수분야들에 대해서 더 준다 인센티브 준다 이런 제도로 간단히 동의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점에 대해서 답변을 주었으면 좋겠고 또 교육부가 통제수단화 한다는 인식이 불식될 수만 있고 진짜 경쟁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대학원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육성지원하는 정책이라면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교육부가 집행하는 것보다는 학술진흥재단

이라든가 제3의 기관들, 중립적인 제3의 기관들, 조금은 비관료적인 제3의 기관에서 이 프로젝트를 관장할 수 있다면 동의해 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수계약제, 연봉제 등은 교수사회에 상당한 긴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은 사실이겠습니다. 다마는 그래도 어느 일면에서는 또 필요한 조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융통성 있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지 답변해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문제 때문에 다른 두 분께는 서면으로 질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威鍾漢 李源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日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日柱委員 오늘 교수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공청회를 참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가 많이 되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 교수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 다마는 교육부의 시안이 너무 졸속이다, 말하자면 교육개혁이 아니고 교육혁명을 하는 단계인데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졸속으로 할 수 있느냐 아마 교육부가 여기 발표한 내용을 보면 98년9월에 시작해서 99년4월까지 약 6개월동안에 아마 교육부 관계자가 44명 그리고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 6명 이렇게 해서 50명이 밑실에서 작업을 한 모양입니다. 사실입니까?

○教育部高等教育支援局長 金容鉉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교육발전5개년계획안입니다. BK21은 아닙니다.

○金日柱委員 제가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육발전5개년계획은 교육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BK21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일대 교육개혁이자 교육혁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를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의견 수렴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들이 오늘 지적한 부분들이 다 들은 바니까 일일이 나열은 안하겠습니다. 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3개월동안 해가지고 만들어 내겠느냐 그리고 불과 달포 남짓 해가지고 신청을 받겠다 이렇게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돈 가지고 해결된다고 할 것 같으면 오일달

러 가진 나라들은 이미 교육개혁에 다 성공했을 것이고 그리고 근대화에도 다 성공했을 것입니다. 돈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李在潤 교수님께서 철학 얘기를 여러 번 하시던데 기본적인 교육철학이 정리되지 않고서는 이것을 못할 것이다. 만약에 이것을 줄속으로 처리해서 관행처럼 지난번 대책대학의 지원 건, 아마 많은 우리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던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다 버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만약에 잘못되어 가지고 일반대학이 교육부가 준 돈은 적당히 소비하면 된다 하는 그런 관행이 이어져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 자리가 앞에 빌딩들이 많이 바라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생각해 봅니다. 저 집이 간단히 지어진 것이나 15층, 20층 저 앞에는 63층짜리 빌딩까지 보인다 말이에요. 그 집 짓는데는 설계기간도 굉장히 오래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여서 했을 것입니다. 판잣집 짓는 데는 푹하고 망치하고 못만 가지면 지을 수 있습니다. 설계가 잘된 다음에도 분야별로 엄청난 인적구성이 된 것입니다. 전문분야의 인력이 구성되어 가지고 저 집을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을 짓는데는 필요한 자금이 뒷받침이 되어서 집이 지어진 것입니다. 지금 벌써 여기에는 돈만 먼저 놓고 흥정부터 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본적인 철학이나 사상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어요. 인적구성은 어떤 분야에 어떤 교수 중심으로 연구분야에 얼마를 투입할 것이냐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금문제입니다. 자금이 결여되면 아무 것도 못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BK21과 같은 아까 張水榮 교수님께서 미국의 예를 굉장히 많이 들어 주셨는데 저는 계체에 교육부 그리고 총장협의회와 교수협의회와 그리고 우리 국회 교육위원들이 과연 어느 나라가 이 사업에 대해서 가장 짧은 기일 안에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시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우리 탁상 위에서 논의하는 것 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돈 가지고 논하지 맙시다. 어느 학교를 어떻게 준다 배정하는 것을 논하지 맙시다. 기본적으로 골격을 세우고 인적 구성문제를 놓고 그 다음에 돈 문제를 논하자.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 김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교수님들께서도 제가 제시한 문제들에 대해서 철학의 문제며 인적구성의 문제며 자금의 뒷받침 문제며 이것을 같이 공동으로 다 연구합니다. 내 나라와 내 민족과 내 국가를 위하는 일이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金日柱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吳陽順 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陽順委員 처음에 공청회 시작할 때 제가 자리에 없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내주신 자료집을 보고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 또 진술인 교수님들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했던가를 잘 알고 있기에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7년간 1조4,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자하는 엄청난 사업인 BK21사업이 계획추진단계에서 연구주최인 교수들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초중등 교사의 집단시위에 이어서 교수들의 BK21에 대한 집단반발은 교육부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교육주최를 배제시킨 채 밀실에서 몇몇 행정관료중심의 논의과정만을 거쳤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두뇌한국 21계획의 수립목적은 정보기반,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해 국가적 차원에서 첨단 지식기술분야의 고등인력양성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21세기를 준비하는 대한민국 국민중에 이같은 목적이행을 위한 BK21사업이라면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BK21이 그 추진과정에서 파생될 수 있는 각종 문제들에 대한 예측과 보완책을 충분히 세우고 있느냐 하는 점에 있습니다.

천여명의 교수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이유도 기본적으로는 BK21의 사업목적에 부정하는데 있다기 보다는 그 동안 추진해 온 연구비 지원사업이 투명성을 의심받아왔던 이유로 이번에 BK21 계획 역시 연구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생각때문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BK21이 본연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기 위해서는 연구비 배분의 투명성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감독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같이 다루어 져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부 관계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교수님들께 질의를 몇 가지 준비를 해 왔습니다라는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한두 분께만 질의를 드리고 나머지 분은 사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黃漢植 교수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BK21계획에 참여한 교수들의 의견중 입안과정에서 변질된 내용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李在潤 교수님께서 BK21은 비록 적은 액수라 할지라도 국가가 연간 2,000억원이라는 재원이 고등교육에 투자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지원이 전혀 없는 것 보다는 낫다는 의견도 다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테고 그런데 이교수님께서 BK21의 전면 철회와 새로운 대학교육계획의 새로운 수립을 말씀 하셨는데 이 교수님께서서는 그나마 2,000억이라는 재원을 투입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획을 마련하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텐데 전면 철회보다는 BK21의 개선이 더 낫겠다는 생각은 안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다른 교수님들께는 서면으로 질의를 해서 나중에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盧武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武鉉委員 대체로 대학원 서열화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지금 대학 서열화때문에 심각한 입시지옥이라든지 고교교육에 큰 문제가 생기는데 대학 서열화부분을 해소하면서 아울러서 대학원 쪽에 이런 것인데…… 대학원 서열화가 대학 서열화보다 안 나올까 싶습니다.

대학원 서열화는 서열화라는 개념보다는 경쟁체제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꼭 필요한 것 아닌가 싶고 재정지원을 통한 인센티브 이런 것을 정책의 수단으로 쓰는 것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교수님께서 지적하셨는데 학부감축하고 대학원중심대학 이것하고를 연계하는 취지가 있을 것 같은데, 학부의 인원을 감축하는 문제와 연계해서 하는 취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취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수도권 집중문제는 대학원은 수도권, 지방은 학부 이렇게 분리해서 자꾸 사고를

하게 되고 모두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서울은 대학원이 집중되고 지방은 학부나 더 먹어라. 이런 의문에 관해서 실제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실제로 그런 대학원의 중앙집중현상이 나타날지에 관해서 지금 기준을 만들어놓고 대강 적용해 보면 그 추정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대학의 구조개혁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학칙과 연계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연계했는지, 이것 때문에 대학을 통제하려고 한다는 대학통제의도라든지 여기에서도 대단히 교수들의 반발을 산 것 같은데 그 동안의 제도개선을 통해서 혹시 해소를 했으면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숙사 짓는 부분에 관해서 장교수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불거지지 않는 대학이라는 그런 의도를 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기숙사 예산부분에 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시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하는데 총론적 방향 부분은 옛날 문민정부에서 했던 교육개혁요람이라든지 이런 책에도 총론적 방향부분은 이미 나와 있었고 제가 작년에 처음 교육위 들어와서 예산을 다룰 때에 이미 총론적 방향이 나와 있었습니다. 2,000억이 다 대학원 중심인데 그때 다 지방문제를 거론을 해서 거점대학육성으로 500억으로 빠지는 것이 지금 지방육성대학으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때부터 했는데 총론의 큰 방향에 있어서는 이미 그때부터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 다 나와 있어서 이것은 밀실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문제가 지적된 것은 예를 들면 학칙과 연계한다든지 구체적인 배분의 선정원칙을 정하는 세부기준이 나올 때 보니까 이것이 좀 세부기준을 정한 때로부터 그때부터 좀 급하게 된 것 아닌가?

오히려 구체적인 이해관계라는 것이 대학교수님들도 걸리는데 세부기준 그것을 놓고 좀더 토론을 하고 예측도 해보고 이해관계라든지 큰 전망도 해보고 이렇게 안 한 것 아닌가 싶은데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이 조정될 때까지 속도조절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관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委員長 咸鍾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在五 委員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在五委員 李在五 위원입니다.

BK21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한 14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으니까 이것은 서면질의할 테니까 교육부에서 충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教育部高等教育支援局長 金容炫 예.

○委員長 咸鍾漢 우리 위원들께서 하신 서면질의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서면질의, 답변서는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在五委員 그리고 한 두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진술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 찬반이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교육부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그 점 하나하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이것의 입안과정이 민주적이어야 하고 또 이것에 대한 절차가 민주적이어야 하는데 이것을 입안하면서 대학교수들과 사전에 논의도 하고 토론편도 하고 또 깊이있는 공청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전체 대학교수들의 반대여론이 없이 이런 것들이 잘 다듬어졌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 점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그 점을 시원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교수님들이 공술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장관 면담요청해도 장관이 면담도 안해주고 다 해놓고 나서 슬쩍 설명회만 하고 이렇게 되면 이것은 문제가 계속 남지요.

그리고 교수님들도 보니까 벌써 6월15일날 부산에서 집회를 했는데 7월8일날 서울에서 또 집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리력으로라도 저지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냥 쉽게 넘어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교육부에서도 옛날처럼 반대하는 사람 있어도 그냥 밀고 나간다 이렇게는 잘 안될 것이예요. 이렇게는 안될 것이니까 그런 점들, 교수님들이 현재 반대하고 있는 이유를 교육부가 편견없이 아주 객관적으로 추려가지고 그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대안이 제시가 되도록 그렇게 교육부가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대로 그냥 국회 공청회도 거치고 하니까 이미 정부가 정책을 세웠으니까 교수님들은 데모를 하든 무엇을 하든 반대하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 이렇게는 안될 것이예요.

그 점을 교육부가 명심을 하시고 각 대학의 교수님들이 반대하는 것에 대한 설명과 대안을 제시해서 이 부분이 새롭게 정립되도록 교육부가 안을 다시 한번 만들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朴範珍 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範珍委員 朴範珍 위원입니다.

오늘 몇 분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당혹감을 느낍니다. 같은 사안을 놓고 너무 극명하게 반대의견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느 쪽 얘기가 정말 옳은 얘기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이공계를 전공하신 교수님들께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반면에 사회과학을 전공하신 선생님들은 또 아주 반대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발전전략에 관한 어떤 시각차가 전공에 따라서 크게 다른 것인가 그런 생각도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우리가 90년대 들어가서 교육예산중에서 대학지원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14대 초반만 하더라도 그때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저희들한테 늘하는 얘기는 우리나라는 대학지원금이 1,200억 뿐이 안된다. 그래서 선진국처럼 한 20% 정도 되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때 2%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금액으로 보면 그 사이에 많이 늘었습니다.

또 몇 가지 사실은 선별지원정책을 취해왔습니다. 아까 전남대학의 黃元杰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일 먼저 국책공과대학지원금제도가 있었어요. 그때 처음에는 400억을 4개 대학에만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정부에서 제안이 왔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과정에서 그렇게 되면 자칫하면 서울중심 몇 대학에만 지원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방대학에도 균형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대학별 100억씩 지원하는 것을 50억씩 8개 대학으로 지원범위를 넓혔거든요. 그 가운데 전남대학교도 그 혜택을 받아가지고 5년동안 지원을 받아서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을 황교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8개 대학을 지원할 때 다른 대학에서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구노력 대응자금 그것도 몇 년씩 하고 있고 또 특성화대학에 대해서도 특별히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교육개혁우수대학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주고 있고 또 우수대학원, 최근에 문제가 된 국제전문인력양성전문대학에 대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균형발전 쪽에 역점을 두어서 이 재원을 쓰느냐, 아니면 전략적인 부문에 집중적으로 쓰느냐? 그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큰 진통을 우리가 겪고 있

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서로 이해하고 화합속에서 사실은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도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제가 한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포항공대가 이번에 BK21사업을 신청했습니까?

○陳述人 張水榮 예정입니다.

○朴範珍委員 전남대학은 어떻습니까?

○陳述人 黃元杰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朴範珍委員 제가 보기에 포항공대 같은 대학은 이공계를 진학하는 학생중에서는 아마 서울대학 다음으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가는 학교이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포항공대가 지방에 있다고 해서 그런 이유로 홀대를 받으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남대학교도 국책공과대학으로 지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았던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하셔서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전남대학교도 만약에 사업대상학교로 선정이 된다고 하면 아까 교수님께서도 누누이 말씀하신 대로 특정 권역의 한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중심적인 대학으로 발전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BK21이 서울대학교를 염두에 두고 시작한 것처럼 처음에 알려져서 지금 반발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서상으로만 보면 서울대학만을 염두에 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업신청을 해가지고 심사해서 되면 하는 것이고 안되면 안하는 것이고 또 반대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아까 李源馥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서울대학교에 친구가 있어가지고 얘기 들어보면 인문사회과학은 다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대학의 경우도 반대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시간을 갖고 어떤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함께 좀 더 논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咸鍾漢 감사합니다.

저도 몇 가지만 여쭙보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BK21이라는 제목을 부치지 않고 13대 때 대학원중심대학에 대한 것을 그때 이미 이 프로그램이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것을 시

작할 때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 연구중심대학이 꼭 있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연구중심대학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하나 있었고 다른 하나는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 모두 서울대학, 연대, 고대 수도권으로 집중을 하니까 그 학부 학생들 집중하는 것을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는 입시제도를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 바꾸는 방법에는 뭐가 있겠는가?

결국 외국에서 택하고 있는 학부와 대학원과 박사과정과 1 대 1 대 2, 1 대 1 대 1, 그런 수준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서울대학교는 대학원중심으로 만들어주고 학부는 3분의 1, 4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학부는 지방으로 연대도 고대도 내려보내면 학부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죽기살기로 입시가 과열되지는 않지 않겠는가?

그 대신 대학원도 동일계 대학에서 대학원을 진학하는 것은 50%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것이 이미 그때 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다른 나라도 정리를 해보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본은 대학원중심대학이 셋입니다. 동경제대, 경도제대 그리고 일교대학 그렇지만 대학원중심대학이라고 각 학부, 학과가 전부 대학원중심대학이 아닙니다. 그것도 다수가 대학원중심대학이고 나머지는 동북대학이라든가 오비히로대학이라든가 나누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학과중심으로 대학원중심대학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모델을 따서 사실은 대학원중심대학체제를 저희도 가져와야 되겠다 해서 처음에 시작을 한 것인데 지금 여러 교수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지방대학은 모두 죽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사실은 원래 목적은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대학원중심대학체제로 잘 운영이 되는 대학이 둘이 있습니다. 포항공대 1 대 1 대 1 수준 그리고 KAIST 1 대 1 대 2 수준입니다. KAIST도 이번 BK21에 참여를 하겠다고 우리도 좀 한번 참여를 하면 안되겠느냐고 묻길래 제가 KAIST에다가 그랬습니다. ‘교육부하고 관계를 맺지 마시오. 당신들이 과기부하고만 관계를 맺으니까 학교가 이렇게 잘 운영이 되는데 이 명문대학을 공연히 교육부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 사람들 감독받다가 큰일나요. 하지 마시오.’ 내가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미 우리나라에 대학원중심대학

이 둘이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유독 이렇게 각 대학에서 대학원중심 대학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나서는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저 분들을 설득을 못했고 설명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대학은 '야, 서울대중심으로 해놓으면 우리는 이류대학, 삼류대학 된다. 이미 대학원중심대학을 하고 있는 대학, 우리도 피해를 입는다.' 왜 남의 대학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해요. 좋은 뜻을 가지고 시작한 것을 그렇게 만들면 안됩니다.

지금 여기에는 서로 설명해서 풀 수 있는 것, 풀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못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입시 제도에서 교장추천제로 해서 한다 그러는데 교장추천제에 대해서도 각 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서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공정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는 것이냐 말도 안된다. 그래도 가장 객관성과 신뢰도가 있는 것은 시험이다, 시험을 쳐야되지 않느냐. 그 대신 한 곳으로 모두 몰리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그래도 명문대학이라는 대학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명문대학의 정원을 줄여놓으면 다른 대학, 자기 고향에서 대학은 나오고 대학원을 진짜 가고 학문을 하겠다는 사람은 서울을 가든, 부산을 가든, 목포를 가든, 제주도를 가든, 생명공학은 제주도를 가야 된다고 하면 제주도를 가고 그때 가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서울로 인구집중도 되지 않고 참 좋겠다는 그런 논리로 사실은 처음에 시작을 했고 진행이 되던 것이 갑자기 BK21로 포장이 되어 가지고 여러분이 내 놓으니까 이것이 희한한 것이고 각 대학이 큰일나는 모양이다 싶어서 전부 난리가 나는 것이예요. 왜 이런 짓들을 교육부가 하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교수님들과 각 대학 총장님, 교수님들 모시고 설득이 되면 이것을 시행해도 되지만 설득 못할 때는 시행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우리 교육위원들 모두 가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黃漢植 교수님하고 李在濶 교수님한테 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가 대학을 똑같이 나누자 이렇게 얘기할 때 똑같이 나누어서 좋을 일도 있지만 각 대학을 전문화해 가지고 우리가 진정 이 나라의 대학교육이 바로 서고 대학원교육이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잘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까 교수님들 말씀처럼 미국이 어떻게 영국이 어떻게 일본이 어떻다는 다른 나라 얘기 안해도 됩니다. 우리나라만 가지고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처럼 전부 중앙집중식으로,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은 우리도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막는 방법이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또 학문중심 교육과정으로서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행하는 데도 이 방법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다 싶어서 교수님들, 학자들이 모여 가지고 이것을 짠 안인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앞으로 지식기반사회에서 그야말로 우리가 연구가 뒤지지 않고 다른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겠다 하는 안이 있으면 그 안을 내놓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교육부하고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안된다는 것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허심탄회하게 속에 내가 무엇을 넣고 있는지 넣고 있는 것 없이 전부 내놓고 논의를 해서 이 문제를 풀면 저는 쉽게 풀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교수님들 뜻을 전해드리면서 느낀 바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李在五委員 답변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물어봅시다. 김국장님!

○教育部高等教育支援局長 金容炫 예.

○李在五委員 6월4일부터 신청받았다고 그러는데 신청이 몇개 대학이나 들어왔습니까?

○教育部高等教育支援局長 金容炫 아직 한 군데도 신청받은 데가 없습니다. 7월20일이 마감입니다.

○李在五委員 그러니까 6월4일부터 시작해서 마감이 7월20일이요?

○教育部高等教育支援局長 金容炫 7월20일입니다. 아마 그 시기가 임박하면 들어올 것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답변을 듣기 전에 우리 방청석에서 교수님들 두 분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여기 의견서 내신 분들 저희가 한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경북대학교 이영문 교수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길요.

○慶北大學校教授 이영문 제가 질문한 요지는 지금 BK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주체들이 어떤 논문발표실적이 어느 수준 이상되는 교수들의 60%가 처음에 되는 집단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0%는 실적이 없더라도 60%만 어떤 실

적이 있으면 그 과가 혹은 그 학부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교수대회 이후에 40%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많은 교수들이 어떤 불만을 하느냐 하면 그러면 자기가 열악한 여건속에서 연구를 해서 자기도 실적이 있는데 자기집단은 그런 40%가 안된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그런 혜택을 못받는다. 다시 말해서 처음에 60%된 중에 40%는 실적이 전혀 없어도 그 집단이 나간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연구를 안하는 교수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방의 소집단의 교수들중에 많은 교수들은 아주 불철주야 열악한 환경속에서 업적을 내지만 결국 거기서는 신청할 자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60%가 아니라 100%를 해라, 100%가 안되어서 예를 들어서 50명을 하는데 서울대학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 집단이 30명밖에 안된다 그러면 20명을 다른 대학에서 유능한 교수를 초빙을 해서 채워서 해라 그런 요구들을 저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 의견이라기 보다는 공정성을 위해서 그런 보완책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咸鍾漢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연세대학교 박대현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世大學敎授 박대현 연세대학의 박대현입니다.

저희들은 전국기초과학연구소 협의회 대표로 나와서 국회에도 여러 번 찾아왔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얘기도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제가 봐서는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반드시 진행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기초과학이든지 어디든지 작년까지 연구비가 투입되어 있어서 아까 여러 교수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

세계 17위의 SCI논문이다, 물론 기업보다는 떨어졌을지 모르지만 연간 성장속도가 30%입니다. 세계 어디에도 그 정도의 SCI 증가속도를 갖는 곳이 없습니다. 이런 잘 되어 가는 상황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실질적으로 교육부나 어디서는 그렇게 얘

기는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에도 돈이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어서 연구비에 지장이 없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연구를 신청하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보면 많은 연구비들이 전부 BK21사업으로 집중적으로 투여가 됩니다.

그러면 물론 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학에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국가적으로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즉 정책들이 유지가 되면서 아까 특수한 집단에 더 투자를 해주어서 훌륭하게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현실적으로 많은 연구비를 없애가면서…… 예를 들겠습니다. 과학재단에서 있던 저변 교수들의 아까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훌륭하고 우수한 젊은 교수들이 큰 대학에 잡(job)을 갖지 못해서 지방대학이든 전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 분들이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은 그대로 유지해 주면서 그 다음에 특수대학, 특수분야에 지원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지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도 잘 검토를 하셔서 입안에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아까 여러 교수님들도 지적하고 했습니다마는 미국에 훌륭한 MIT에 100명 이상의 교수가 있고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방금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한 학과의 모든 교수가 다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은 학과단위의 개념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프로젝트 개념으로 들어가 주어야 그 학과가 특성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의 어느 학과가 30명이 있는데 그 30명 교수들이 대학원중심 BK사업을 받아서 모든 분야를 다 훌륭하게 키울 수 있다고 봅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보다는 정말 어떤 프로젝트 베이스로 즉 우수한 개인 교수가 신청할 수 있는 형태의 안을 짜 주어야 그 형태로 많은 선택이 된 서울대학이 대학원중심대학이 되는 것이고 MIT가 그런 훌륭한 프로젝트를 가졌기 때문에 그 분야의 교수들 더 초빙하면서 하나로 특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정책이 흘러가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첫째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는 저변연구인력 확대정책 교육부가 지금까지 아주 잘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과학 육성사업해서 한 500억 되

는 것을 지난 20년간 해왔고 원래 그 부분을 25년까지 5차 5개년까지 하기로 했는데 금년에 전부 끝내 버렸습니다. 그것이 전부 BK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17위에 해당하는 그 수준이 아까 우리 장총장님이 비교를 해주셨습니다. SCI는 17위이고 서울대학은 세계적인 대학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다 하는 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소리냐, 한 곳에 집중된 인원만이 우리나라 기초과학에 컨트리뷰션(Contribution)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변을 철저히 키워주면서 거기서 경쟁력있는 그룹을 키워주는 것이 우리나라 과학정책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이 부분을 앞으로 수정해 주고 보완해 주시고 너무 조급하게 다루어 주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걱정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제가 있는 곳도 그렇고 주위에서 보면 요사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선도그룹이 20명이라고 제한을 했기 때문에, 50명짜리 말고 적은 단위입니다. 적은 단위에서 20명을 겨우 맞추어 놓았습니다. 아니면 맞추지 못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에 있는 물리과가 저쪽에 있는 재료과하고 적당히 합칩니다.

그것은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서 합쳐서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응용과 기초가 합쳐지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조급하게 물리적으로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합쳐지기 때문에 그 후에 올 후유증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한 대학이 선도그룹이 되면서 다른 대학을 거기에 합쳐라 그랬을 때 그 두개의 대학원교육이라는 것이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한 학과에서 가르치고 하는 제도는 저는 바르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다른 대학에서 합쳐진 그 사람들이 거기가서 교육을 받을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나머지는 자기대학에서 3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정말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봤습니다. 인력양성 사업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때문에 모든 방향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느냐 싶은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많지 않는 연구인력을 가지고 뛰어나가려면 기존적으로 양성된 그것도 국가

가 지원한 것이 아닙니다. 어렵게 외국에 자기의 힘으로 가서 공부해 오고 한 사람들의 연구력을 계속 키워주면서 새로운 인력도 키워나가야지 기존인력들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버리고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갔을 때에는 이것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을 우리 정책당국에서 좀더 생각해 주시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토의나 이런 것을 거치면서 조정을 해주시면 바람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威鍾漢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박대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 새로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키우는 것도 소중하지만 이미 키워온 소중한 젊은 소장학자들 지방대학에 가 계시지만 우수한 박사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BK21로 인해서 희생될 우려가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기초과학분야, 응용과학은 저희들이 외국에 나가보니까 그래도 산학협동차원에서 기업에서 필요하면 연구비도 들이고 그러지만 기초과학이라는 것은 돈되는 것이 아니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투자를 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과학이나 인문과학 그리고 기초과학문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고려를 해서 그 분들에게 나가고 있는 현재 연구비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으면 몰라도 그분들 것을 빼앗아다가 BK21에다가 모두 투여한다는 것은 BK21이 아니라는 것을 유념하셔서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청석에 더 말씀하실 교수님 계십니까?

한분만 더 받지요. 말씀하세요.

○江原大學校教授 姜치원 강원대학교 강치원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정부발표안에서도 이 BK21사업이 가지고 있는 두가지 목표는 하나는 사교육비로 대표되는 한국의 입시제도를 개혁한다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한국의 학문과 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두가지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개혁은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추진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소위 97년도, 96년도 서울대학교특별법 추진, 97년도 서울대법 추진 그리고 98년도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 속에서 학교장추천제 입학제도를 받아주는 대신에 7년 동안 서울대학에 1조4,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그 안이 98년도에 있었는데 그런 역사적인 맥락속에서 이름이 수시로 바뀌어 오다가 오늘날 BK21로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정책은 뭔가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책의 정직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제 주변의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입시제도 개혁문제인데 분명한 사실은 입시제도를 개혁할 때 예를 들면 학부정원을 줄이고 대학원으로 집중하라, 그러면 대학이 학부에 집중하지 않고 대학원에 집중하면 대학의 입시제도가 개혁되는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학이 학부입시제도에 집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회에서 그 대학이 대학원 대학으로 라벨이 붙어버리고 대학원대학으로 표딱지가 붙어버리면 훨씬 더 대학의 서열은 강화되기 때문에 그 대학에 있는 교수들이 학부입시제도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는 더 엄청난 일류대학의 고착화, 서열화를 통해서 입시가 치열하게 강화될 염려가 있다. 이런 점이 하나 우려된다는 것이지요.

물론 이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학교장추천제를 받으라는 얘기거든요. 수능점수 한 줄 세우기가 학교장추천제, 내신제를 통해서 분명히 개혁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역시 대학의 서열화의 강화를 통해서 입시제도는 더욱더 치열해진다는 것이 제 뜻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학의 학문과 교육의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어떤 특정한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우리 나라 대학경쟁의 초점이었는데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다고 한다면 아까 누차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특정한 대학원을 들어가기 위한 경쟁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저는 이런 것을 우리 한국에서의 엘리트류적경쟁, 단협경쟁이라고 보고 정말로 우리의 학문과 교육을 걱정한다고 한다면 대학간의 경쟁, 교수간의 경쟁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야말로 상위 몇 개의 대학이라도, 저는 이것을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너무 적은 수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권역별로 아니면 한 2-30개 정도의 대학이 서로 이동하면서 교수가 교류하면서 대학간의 경쟁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특정대학

에 입학하기 위한, 특정 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학문과 경쟁을 막을 수가 있다.

따라서 제 개인적인 사건으로는 이 정책은 입시제도의, 오히려 사교육비를 조장할 염려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진정한 의미의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바람직한 학문과 교육의 경쟁을 오히려 방해할 소지가 있다 이런 점을 제 개인적인 사건으로 말씀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수고하셨습니다.

朴承國 위원님 말씀하세요.

○朴承國委員 긴장도 풀고 할겸 제가 솔직한 얘기 한마디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강원대학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처음에 예산을 내놓았을 때 장관이 2,000억을 서울대학에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무슨 소리냐’ 하고 들고 일어나 가지고 ‘지방과 똑같이 써라’ 해서 거기에서부터 나온 것이 BK21이고 지방에 500억 주는 그것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들이 아실 것은 국회가 그래도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아시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립니다.

○委員長 咸鍾漢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어느 위원님에 대한 답변인지를 적시하시고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앉으신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金容炫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教育部高等教育支援局長 金容炫 고등교육지원 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朴承國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부도 수도권의 비대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균형발전한다는 문제는 필수적인 사항으로 알고 예컨대 저희가 대학편입학제도도 이제 재학생 개념에서 제적생 개념으로 변화시키면서 하는 일련의 조치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대학 황폐화 현상이 우려되기 때문에 BK21 사업을 지방대학 지원만으로 전환할 생각이 없느냐 하는 말씀은 이제 저희가 7월20일에 신청을 또 받겠습니다마는 그 동안 저희가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완화된 기준요건으로 본다면 또 아까 黃元杰

교수님 발표내용에서 본다면 상당수의 지방대학이 자신감을 갖고 준비하고 있고 진입할 것으로 저희는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관이 왜 교수협의회 대표단을 만나주지 않았느냐 하는 이유에 관해서는 제가 장관님께 여쭙어보고 별도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립대학의 정원, 시설 등 왜 교육부가 통제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薛勳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왜 대학입학제도의 개혁이라는 것이 이 사업에 굉장히 중요하고 이로 인해서 초·중등교육 정상화가 이루어진다고 볼 텐데 만약 BK21사업에 신청하는 대학의 대학제도 개혁 사업 약속이행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는 사업신청을 받고 그 약속이행이 선결과제로 되지 않을 때는 심사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제도개혁과 사업에 관한 평가를 같이 하도록 하면서 제도개혁을 사전요건으로 저희가 심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李源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육부가 이 BK21사업을 줄속하게 하고 밀실작업을 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 8월부터 6개월에 걸친 다각적인 작업 또 의견수렴을 거쳤고 지금 저희 교육부로서는 상당히 난감한 문제중의 하나가 원래 이 사업은 금년 1월1일부터 2,000억을 사용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늦어도 금년 3월1일부터는 대학원생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이 들어갔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직 사업을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6개월이 지체된 현상에서 과연 금년에 2,000억을 어떻게 저희가 활용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예산당국의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발전계획문제 이것이 아직도 서울대 중심인지 아니면 많은 대학이 참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창기에는 당초 계획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기준 자체를 다운시킨 입장으로 보아서는 상당수의 많은 지방대학을 포함한 많은 대학의 참여가

저는 기대되고 있습니다.

○李源馥委員 참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선정이……

○教育部高等教育支援局長 金容炫 선정도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동의없이 사업공고를 한 이유는 무엇인지 하는 것은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릴만한 기회가 없어서 못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7년간 계속되면 한국대학의 교육의 질이 정말로 높아질 것인지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기대하고 있고 아까 다른 진술인의 발표로 보아서도 7년이 짧다면 짧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기간을 늘리고 예산지원 폭도 넓혀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 연구의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문제라고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는 저희는 결코 교육과 연구를 이원화시키지 아니하고 교육은 교육대로 다시 교육에 바탕을 둔 착실한 학부에 기초한 대학원의 연구가 중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지원은 계속될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金日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李源馥委員 잠깐만요, 지금 이것 세부사업 시행 내역을 보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스킴이 나와 있습니다.

이 스킴을 보면 이 사업에 대한 철학도 보이는 것입니다. 놓고 보면 과학기술분야 900억, 인문사회분야 100억 그 다음에 지역우수대학 500억, 시설 구축 하는데 50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과학기술분야, 인문사회분야는 이렇게 해놓고 응용과학분야는 이 나라에서 안 할 것입니까, 응용과학은 대학원 이 나라에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제가 하나 묻는 것입니다.

이런 스킴들이 벌써 나와 있는 틀 자체가 오히려 비과학적이예요. 이 나라에 응용과학 필요 없습니까?

그 다음에 지역우수대학 이렇게 해놓고 나면 지역우수대학 주기 시작하면 과학기술분야와 인문사회분야는 지역대학들은 못 받습니까? 이 구조 틀에서만 놓고 보면 그런 오해의 소지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그냥 과학기술분야에서 얼마, 인문사회분야 얼마, 응용과학분야 얼마 하고 뽑아 놓은 것을 보니까 지역대학원들도 많이 들어가 있으면 되는 것인

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스킴이 어떻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습니까? 이것 조정되어야 됩니다.

뽑아 놓고 보니까 각 지방의 많은 대학원들이 많이 뽑혀 있어 가지고 구석구석 이 나라의 중앙에 있는, 서울에 있는 대학원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우수한 명문대학원들이 탄생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주면 되는 것인데 응용과학분야 하나도 없고 이것을 지역과 그것으로 나누어서 지역의 우수대학들은 말하자면 여기에서만 나눠먹어라 이런 식이고 나머지는 손도 대지 말라는 식으로 보이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教育部高等教育支援局長 金容炫** 지금 이 사업의 선정에 관해서는 그 동안 대학공학인증위원회라든지 전문가 집단들의 자문을 받아서 선정을 했고 나머지 사업을 위원님이 잘 보시면 현재 대학이 위치한 능력과 여건에 따라서 다양한 사업을 자기 기준과 여건에 맞게끔 신청할 수 있도록 지금 여섯개 분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분야도 과학기술이나 인문사회가 지역우수대학이 여건상 안 된다면 특화분야나 핵심분야로 그 학교 자체가 아니면 개별교수가 아니면 기존의 학술연구조성비 사업으로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李源馥委員** 교육부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앞으로 이 나라 대학원발전계획의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안의 기초를 세우는 작업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기초 세울 때부터 뼈격뼈격 하기 시작하면 이것 나중에 세월 지나고 나서 조정하기는 대단히 힘들어집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教育部高等教育支援局長 金容炫** 잘 알겠습니다마는……

○**李源馥委員** 이렇게 스킴 자체도 말하자면 몇 사람이 졸속적으로 만든, 누구의 자문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이 스킴 자체가 타당성이 없어요.

그래놓고 이것을 정부가 앞으로 한두해도 아니고 7년, 한 두 해 또 가면 10년 가고 20년 갈텐데 처음에 세우는 기초부터 타당성이 없게 세워놓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허락이 됩니까?

그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 나중에 다시 논하기로 하고 제가 질의한 것 가운데 그나마 지역우수대학 하는데 경기, 인천은 왜 없습니까? 제가 물었

는데 왜 답변 안 합니까? 경기, 인천 대학들은 항목 자체에 없어요. 신청 자격이 없어요. 경기와 인천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대학도 아닙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지역우수대학들을 보면 부산은 별도항목에 되어 있고 울산 경남도 있고 대구 경북 주고, 광주 전남도 있고 다 되어 있는데 경기 인천은 왜 빠지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것을 어디에 갖다 놓을 것이예요?

저는 이 스킴 자체도 마음에 안 듭니다마는 이것 지역 이름을 가릴 것 없이 분야별로 해서 프로젝트 받아 가지고 내주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내주는 가운데서 비교적 보면 지방대학들이 특화되어 가지고 특화된 분야에서 지방대학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스킴 자체에서도 경기, 인천 같은 데는 기본적으로 빠져 있는데 왜 대답을 안 하고 넘어갑니까?

○**教育部高等教育支援局長 金容炫** 경기, 인천 관계는 신청 자격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해서 인구유입 요인이 있는 경기, 인천지역은 일단 제외하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 나머지 시·도에 배정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源馥委員** 경기, 인천은 앞으로 대학원 안할 것입니까?

○**教育部高等教育支援局長 金容炫** 이것은 지역우수대학 육성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李源馥委員** 이 나라 인구분포도 상으로 수도권이 2,000만명입니다. 그 중 서울이 1,000만명이고 경기, 인천지역이 1,000만명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教育部高等教育支援局長 金容炫** 예, 맞습니다.

○**李源馥委員** 그 섹터는 어디에서 찾을 것입니까? 그 많은 대학들은 BK21 전체에 대해서 도대체 어느 프로젝트에 가서 참여할 자격을 얻습니까?

○**委員長 咸鍾漢** 그것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李源馥委員**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것이 도대체가 무슨 말이에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스킴 자체가 이상한 것을 만들어 와서 엉뚱하게 1,000만명 인구가 있는 지역의 대학에 대해서 지원자격도 하나도 안 주는 이런 스킴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무슨 합리성이 있고 과학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어요?

○委員長 咸鍾漢 계속 답변하세요.

○教育部高等教育支援局長 金容炫 예.

金日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부가 너무 졸속하고 신청·작업기간이 1개월 반이라는 것은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미 이 사업 자체가 상반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기간을 여기에 보낼 수가 없어서 부족한 듯 하지만 어쨌든 저희는 2학기부터는 이 사업에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한 조치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보다는 철학이 더 중요하다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또 BK21사업을 위해서 교육부가 총장협의회, 교수협의회 등의 분들과 성공적으로 시행되는 나라를 실천하시자는 말씀은 제가 장관님께 보고를 드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하시는 문제는 저희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日柱委員 아까 강원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여러 가지 느낀 바가 많은데 어느 쪽 보는 것이 가장 좋겠는지 위원님들도 같이 가 가지고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군대를 여기에서 우리가 선정을 해 가지고 단시일내에 가 보고 올 수 있도록……

○教育部高等教育支援局長 金容炫 그 문제는 저희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吳陽順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BK21사업이 부익부 빈익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연구비 배분에 투명한 그리고 체계적 관리대책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연구비 심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교육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1차심사를 하고 다시 해외의 석학들로 구성된 자문단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재심사를 하고 다시 학계의 권위자로 구성된 기획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는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盧武鉉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委員長 咸鍾漢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教育部高等教育支援局長 金容炫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李在五 위원님의 내용도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서면답변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教育部高等教育支援局長 金容炫 朴範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교육부가 이런 사업을 할 때 많은 검토를 하라는 충고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咸鍾漢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교수님들과 같이 만나서 이 문제를 더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오늘부터 진행되고 있는 대학총장세미나에 장관께서도 저희 실무진도 가서 총장들과 논의를 해서 본래의 뜻이 충분히 대학에서 이해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그런데 총장님과 교수님들이 조금 다르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教育部高等教育支援局長 金容炫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방청객 의견 나온 것도 제가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委員長 咸鍾漢 하세요.

○薛 勳委員 요지는 이것이에요.

대학별로 학과별로 학부별로 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는 교수 한 분이 계시는데 한 분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프로젝트 단위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 답변해 주세요.

○教育部高等教育支援局長 金容炫 진술인 답변 속에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연구능력이 있는 기본사업단 규모를 이번에 굉장히 중시하고 그 사업단 속에서 우수한 연구가 나온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능력있는 지방대학이든 수도권대학이든 개별교수의 참여가 제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큰 세계수준의 대학원육성사업에서……

다만 이런 분들에게 저희가 핵심사업분야에 345 억원을 배정해놓고 이 분들이 자유스럽게 들어와서 연구를 하시면서 다시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초과학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委員長 咸鍾漢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교수님들의 뜻대로 사업단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지 그냥 지금처럼 어느 프로젝트에 참여해 가지고 그것이 연계가 되어서 큰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로만 그렇지 그것이 안될 것이예요.

○薛勳委員 김국장이 설명하시는 것이 무슨 말인지 대충은 알겠는데 그렇게 이해가 안 되니까 예를 들어 설명해 보세요.

○教育部高等教育支援局長 金容炫 위원장님,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우수인재 육성입니다. 대학교수의 연구프로젝트사업이 아닙니다. 인재를 양성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규모의 단이 있어야 되고 그 단 속에 포함된 일정규모의 대학원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 분의 교수가 단이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어느 단에 합류가 된다고 그래서 대학원생을 가르치고 육성한다는 것은 세계수준의 대학원육성 사업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별도의 자리를 핵심분야에 저희가 설정해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咸鍾漢 다음 權旭鉉 교수님 답변하실 것 있으십니까?

○陳述人 權旭鉉 예, 李源馥 위원님 질문에 대답을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이 세 가지 있었습니다.

제도적인 문제가 선행되어야 BK21사업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제도적인 것이 선행이 안되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제도적인 것을 대학에서 약속을 하고 약속사항이 이행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농담을 하나 하겠습니까마는 뭘 바꾸려고 그러면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전쟁을 하든가 아니면 돈 주고 사든가요. 그래서 이것이 재정지원으로 아마 개혁을 시도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중에 인문사회대는 왜 그렇게 비판하느냐? 저는 사실 보직교수가 아니라서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문사회대에서는 아까도 여러 번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철학이나 자율성 이것을 돈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마침 예산도 적고요.

또 이 예산을 통해서 대학이 제도개혁 예를 들면 광역모집이라든가 상당한 것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한 좀 찬성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막상 들어온다 하더라도 분야가 제한되어 있고 또 grouping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이것은 공식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또 아까 마지막 질문에서 특정분야 7개를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냐? 분야가 많지 않느냐? 예를 들면 저희 공과대학에서는 토목건축학과, 아까 아파트도 말씀하시던데 토목건축이 굉장히 시장성이 큼니다, 그것이 빠지나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여기에는 전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얘기하기는 기술을 분류할 때 내수산업, 수출산업 이렇게 분류합니다. 내수라는 것은 시장이 아무리 커도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수출할 때는 세계와 경쟁하는데 예를 들면 자동차, 반도체 이것이 수출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출산업적인, 국제경쟁이 되는 데에 기술을 지원하고 또 현재는 아니지만 미래에 산업적인 것 예를 들면 생명 같은 것, 수출산업 같은 경우는 자동차, 기계, 정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포괄적인 그리고 경쟁력의 기초가 되는 분야를 하다 보니 7개라는 것을 저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다음은 李在潤 교수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陳述人 李在潤 저한테 질문해 주신 위원님께서 李源馥 위원님께서 세 가지 해주셨고 吳陽順 위원님께서 한 가지 해주셨고 그리고 咸鍾漢 위원님께서 한 가지 해주셨습니다. 순차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李源馥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연구와 교육이 이분법이 아니고 또 한 10개나 20개 대학원이 선정이 된다면 형평성에 과히 어긋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지요. 저는 학교 선생이라 그런지 사실 정책이 진솔해야 되고 목표라고 하는 것이 뚜렷하게 아주 직선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돈이라는 것이 지금 문제되는 것으로 자꾸 나오는데 저는 오히려 돈은 그것은 뒤의 문제입니다. 돈은 쓰는데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병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BK21이라고 하는 돈은 병이 된다는 것을 저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같이 또 나누어서 배분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목적이 인력양성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대학원을 아주 딱 하나 만드는 것이냐, 아니면 전국적으로 특성화된 연구를 키울 것

이나, 그렇지 않으면 전국적인 교수들의 창조적인 연구능력에 하나의 풍토를 조성할 것이냐?

어느 것인지가 분명치 않고 거기에 더해져서 입시 제도까지 들어가 있고 다시 말하면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여기다 갖다가 더덕더덕 붙여 놓았기 때문에 사실은 가치관에 혼란이 옵니다. 가치관에 혼란이 오는 돈이라는 것은 이것은 병입니다. 절대로 약이 안됩니다.

제가 그래서 철학이라는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요. 그러면 창의적 연구 및 교육문화 풍토를 이룰 것이냐, 아니면 어떤 직선적인 아주 초점 있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단기 효율성을 거기서 보려고 하는 것이냐 이것이 지금 분명치가 않습니다. 막 섞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말씀드리는데 이런 지금 혼란된 가치관 속에서는 설사 대학원이 10개, 20개 몇 개가 된다 하더라도 전국에 대학이 180개나 됩니다. 나머지 대학들은 다시 말하면 두뇌한국에 못 들어가요. 선정된 것은 두뇌 있는 대학, 선정이 안된 것은 대부분 100 몇 십개는 두뇌가 없는 대학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두뇌가 없는 대학에 자부심이 뭐 있을 것이며 거기에 지원하는 대학생은 처음서부터 어떤 마음으로 가야만 되며 거기 근무하는 교수는 어떻게 되며 많은 연구능력……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대학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기관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전국에 대학교수들 역량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작업이 물론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우수한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완전한 새로운 틀을 우리가 짜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대학이라고 하는 어떤 조직이라는 것은 완전히 문을 열어버려 가지고 우수교수들이 마음대로 들고 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짜야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작업을 하지 않고는 21세기 넘어 가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과거에, 현재에 인위적으로 일그러진 서열화된 대학개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李源馥委員 교수님, 잠깐만 제가 한 말씀 보태겠는데요.

제3의 듣는 분들, 청자한테서 오해소지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교정할 것이 하나가 있어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는 전국 대학의 숫자에 비해서 이것이 20개 대학원이 되든 15개 대학원이 되든 이렇게 한다 해서 형평성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저 개인 인식은 그렇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그 본의는 어느 정도 조정됐다고 좀 양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형평성 문제가 저는 이것으로써 해결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陳述人 李在潤 제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기본철학과 원칙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다, 안된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 통제수단이나 이런 것이 없고 그 꼬나풀이 하나도 없고 진정한 육성으로 교육부와 정부가 갔을 때는 어떠냐? 이것은 지금 전제 자체가 지나치게 이상적입니다. 항상 정부는, 교육부는 돈을 가지고 나올 때는 꼬나풀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교육부가 확일적으로 요구하는 어떤 통제지배 수단화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관료적인 조직이 학술진흥재단이나 이런 데가 주체가 되어서 하면 어떠냐 하셨는데 지금 학술진흥재단이나 이런 데 저는 뭐 기관을 특별히 얘기 안 합니다마는 우리 나라의 교육부를 정점으로 하는 교육관련 단체나 심지어 대학, 사립 대학까지도 전부 수직적 지배통제권력구조 속에 지금 꼼짝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한다면 아까 金日柱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교육부, 총장, 교수협의회, 국회 이렇게 해서 하나의 협의체가 전문가와 더불어 우리 나라의 정말 21세기의 대학정책 그리고 이 문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BK21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2,000억 가지고 BK21이 가능합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MIT 한 대학 연구비의 3분의 1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안되는 것 이것은 시드머니예요. 창의적 연구 및 교육문화풍토 조성에 씨앗투자로서는 훌륭합니다마는 이것을 가지고 결과를 완전히 산출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기본부터 잘못되어 있습니다.

셋째 계약제, 연봉제가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시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것은 전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제도라는 것은 토양이 중요합니다. 이 토양이라는 것이 미국식인데요. 미국에는 전제가 되는 수요시장이 있습니다. 경력교수가 항상 다른 대학교에 월급을 올려받기 위해서 교섭을 합니다. 또 1년이고 몇 년에 한 번씩 교섭을 할 때는 반드시 형평성에 따르는 교섭력을 가지고 쌍무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경력교수의 수요시장의 개방체제와 대학간의 교류라고 하는 문제가 전혀 막혀 있는 지금이 입장에서 전권을 쥐고 있는 대학 이사장이나 총장과 개별 교수가 마주 앉았을 때에 교섭력이라는 것은 전무합니다.

이렇게 전무한 입장에서는 결국 교수가 비굴해질 수밖에 없는데 교수가 비굴해지면 창의성이라는 것은 물 건너간 것입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교육도 물 건너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근래에 와서 우리 나라의 교수님들이 기백이 많이 죽어 있습니다.

한 마디 좀 사족을 붙인다면 일본의 군국주의 시대에 일본 동경대학, 당시의 동경제대 국제법 학자가 을사보호조약을 위시해서 만주…… 모든 일본정부가 체결한 조약들은 무효라고 주창하면서 이론적으로, 강연으로, 교실에서, 국제적으로 다니면서 활동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때 그 군국주의 일본도 그 교수에 대해서 요만큼도 제재를 가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도 태평양전쟁을 3년이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연구를 독려 촉진하는 방법은 이것은 별도로 얼마든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구태여 계약제, 연봉제를 통해서 교수들을 독려할 필요가 없이 그것은 별도의 연구 독려촉진책이라는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咸鍾漢 위원장, 朴範珍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현재 기간임용제에 따르는 엄격한 제도 운영을 하면 충분합니다. 재임용에서 탈락이 대개 1년에 한 70명씩 됩니다. 오히려 재임용에서 부당하게 탈락된 경우에 이것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재심사 할 수 있는 구제제도 이것이 오히려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은 대단히 청원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세 가지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둘째번으로는 吳陽順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있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마치 저희 교수들이 돈이 생기니까 돈 가지고 다툼이 생기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정부도 KAIS라고 하는 별도의 특수대학원을 지금으로 치면 몇 천억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그 때에 물론 일부에서 불평은 합니다마는 교수들이 1,000명씩 거리로 행진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또 지금도 만약에 극단적으로 이 돈을 어디다 준다, 딱 부러지게 아주 정말 정직하게 얘기를 한다면 그것을 타지 못하는 경우에 불평은 할망정 거리로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사립대학이나 지방대학 정부가 몇 푼 도와 줬습니까? 총 운영비 2,000억원에 30억이라 해봤자 1.5%입니다. 왜 잔돈푼을 가지고 준다, 안준다 하면서 두뇌가 있는 대학과 없는 대학을 인위적으로 구분을 하려고 합니까? 두뇌가 없는 대학이라고 지목이 됐을 때에 학사행정은 마비되고 학교는 뒤집히고 그리고 학교 교수들은 전부 실의에 빠지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 2,000억이라는, MIT연구비의 3분의 1밖에 안되는 이 잔돈푼을 가지고…… 정말 밤낮을 교수들이 자기의 명예를 걸고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두뇌 없는 대학이라는 그런 낙인을 찍으려고 하는 제도를 왜 운영을 합니까?

이것은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들이 1,000명이 지금 거리로 나오는 것이고 7월8일 또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을 강행할 때는 정권차원에까지 문제를 저희 교수들은 제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돈은 병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약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돈을 부분적으로 지금 타려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요. 오늘도 아마 발표하신 분 중에 이 계획의 입안과정에 참여했던 분들이 여기 여러분 오늘 진술인으로 나오셨습니다. 이것은 사회과학과 이공계통의 전문성에서 오는 구분이 아닙니다. 우연히도 사회과학 하신 분은 양쪽에 교수 협의회 대표들이고 이공계통에 계신 분들은 이 계획에 참여하신 어떻게 보면 주역들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얘기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칫 이 미끼를 가지고 대학 교수사회를 Divide and Rule, 분리시켜서 지배하겠다는 아주 나쁜 것이 숨어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셋째번으로 咸鍾漢 위원장님께서 똑같이

나누자 하는 우려도 말씀하셨고 전문화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학과 대학원의 전문화, 이 전문화라고 하는 문제는 인위적으로 남이 전문화를 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전문화라는 것이 표방되어서도 안됩니다.

각 대학, 180개의 모든 대학은 그 중에 사생결단하고 연구하는 교수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교수 중에 한 분은 지금 조금 지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12년 동안을 집에 하루도 가지 않고 도시락을 이렇게 일주일치씩 싸 가지고 오고 제자들도 석사과정 들어오고 박사과정 들어오면 집을 못 갑니다. 3년이고 7년이고…… 거기서 밤낮 없이 그냥 밤2시까지 토론하고 여섯시에 또 토론 시작하고 그래서 텔레비전에도 ‘이 사람’ 이런 것으로도 나오신 분이 계신데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외국유학을 하고 와서 일본을 이겨야 되겠다, 미국을 이겨야 되겠다, 일본을 무릎꿇게 하겠다. 무릎꿇게 하는 방법은 한 번 학문으로 대결하고 제자로 대결하자 이런 독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것이 대학 이름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대학 이름을 자꾸 들먹이게 되고 이런 구도 속에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이렇게 되면 그런 씨앗들이 다 죽어버리거나 실의에 차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2,000억이라는 잔돈푼을 가지고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사명감과 지혜와 피가 나는 이런 정신을 모독을 하려고 합니까? 제가 오늘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은 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연히 사립대학과 지방대학과 또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것을 전국적으로 정말 교수님들을 지금부터는 찾아야 됩니다. 신청해라 해 가지고 읽어보고 평가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대학평가라는 것 안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찾아 나서야 돼요. 옛날에 임금님도 달밤에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수들의 이 우수한 연구자들을 전국적으로 발굴을 해서 이 사람들이 대학의 벽과 모든 것을 다 헤치고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새 틀, 뭐 극단적으로는 대학의 이름을 다 없애도 괜찮습니다. 이런 전국적인 우수한 연구인력이 정말 열린, 결집을 할 수 있는 판을 새로 짜야 되겠다 이 말

씀을 제가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吳陽順委員 질의한 사람으로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李교수님 말씀 아주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李교수님이 아까 돈이 생기니까 그렇다는 것 아니냐는 식의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오해를 해서 여쭙어본 것은 아니고요. 그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차제에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저도 제 남편이 지방대학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의견을 갖고 계시는 교수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교육부 김국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투명성확보는 되어 있다…… 그것이 납득이 가서 제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구비나 이런 것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부처가 직접 관여는 안 하지요. 다시 무슨 위원회니 뭐니 해서 거기서 심의해 가지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그 관례에서 자연이니 학연이니 뭐니 해 가지고 그 배분과정들이 별로 투명하게 안 나타났기 때문에 더 불신이 쌓여졌으니까 지금까지의 그런 방법들이 아닌 다른 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陳述人 李在潤 吳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朴範珍 다음은 張水榮 교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述人 張水榮 저한테는 薛勳 위원께서 기숙사문제를 질의하셨는데 물론 예산이 많으면 많은 대학에다가 기숙사를 지어주는 것이 대학원연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2,000억이라는 얼마 되지 않는 돈에서 또 4분의 1을 특정대학에 기숙사를 지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지 저는 기숙사 지어주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중심대학으로 선정된 대학들은 점차 그러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물론 좋다고 생각합니다.

○金日柱委員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25일에 나카소네 전 수상을 모시고 광양하

고 포항제철하고 포항공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포항공대가 1위를 했다가 금년에 인도 어느 대학에 뒤져서 2위가 되었다고 하던데 왜 2위가 되었습니까?

○陳述人 張水榮 인도한테 뒤진 것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 대덕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원이 1등을 하고 포항공대가 2등을 하고 인도가 3등입니다.

그 이유는 한국과학기술원이 생긴지가 우리 대학보다는 15년 전이니까 지금 28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원생이 우리 대학보다는 3배가 많습니다. 또 거기는 과학기술부에서 특별지원을 받기 때문에 저희보다 교수도 많고 학생도 3배 정도 많고 하니까 연구업적이 우리보다 많습니다.

○金日柱委員 포항공대에 가니까 포항가속기연구소라는 것이 있는데 방사광가속장치 이것은 일본 대학에도 지금 없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 나라 최초라고 하는데 나카소네 수상이 광양제철을 보고는 '제철공장이 아니고 연구소에 온 것 같다'고 그래요. 그리고 학교단지 쪽 보고 느낀 것 하고, 마지막에 '포항공대에 와서 느낀 것이, 나는 27년전에 보고 이번에 와서 보았는데 한국의 저력에 대해서 놀랐다'고 하면서 방사광가속장치를 보고 굉장히 놀랐다고 그래요.

그것을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지요.

○陳述人 張水榮 우리 방사광가속기는 있기는 포항에 있지만 전국 교수들에게 다 개방되어 있어서 많은 연구자들이 와서 거의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대학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지만 일본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큰 가속기를 가지고 있고요. 두번째로 큰 것이 미국에 있고 세번째가 프랑스, 우리가 네번째 정도 됩니다.

물론 한국에는 하나밖에 없지만 미국에는 대 여섯 개가 있고, 일본에도 열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우리 나라 방사광가속기 연구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金日柱委員 예를 들면 파리 내장까지 들여다 볼 정도라고 하던데요.

○陳述人 張水榮 톱니바퀴가 파리 머리 위에 올라갈 정도로 작은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李源馥委員 張水榮 교수님께 서면으로 제가 질의를 한 것이 있거든요. 조금 답변 주시고 가셨으면 싶은데요.

○陳述人 張水榮 우선 첫 번째로 '2002년까지 타 대학 학사과정출신자를 50%이상 받도록 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하였는데 이것은 강제사항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질의하셨는데요. 이것은 아마 강제로 하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강제사항으로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A대학 출신자는 전부 A대학으로 가고 B대학출신자는 전부 B대학으로 가고 지금 대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그것을 열어놓아야만 서울대학 졸업생이 부산대학 대학원에 가고 부산대학 졸업생은 경북대학으로 가고, 경북대학 졸업생은 연세대학으로 가고 이렇게 왔다갔다해야만 우리 나라 학문이 제대로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율결정에 맡겨서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朴範珍 간사, 咸鍾漢 위원장과 사회교대)

두 번째 질의는 각 대학에 지급되는 각종 연구비는 교육부 뿐만 아니라 과기부, 산자부, 농림부, 정보통신부 등 여러 군데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총망라해야 되고 이것을 조정하는 통제기관이 있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에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국방부에서 주는 연구비는 국방부대로의 목적이 있어서 주는 것이고, 산자부는 산자부대로의 목적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한 기관에서 통합하게 되면 결국 사회주의국가에서 연구를 전부 중앙에서 통제하는 것과 비슷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힘들고요.

그러나 정부차원에서 제가 듣기로는 姜昌熙 전 과기부장관이 정부내에 이러한 것을 모두 통합하는 어떤 위원회를 하나 만들겠다는 말씀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실지로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정부 자체에서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어떤 기관을 만들어놓으면 그것이 또 중앙집권화 되고 관료주의화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李源馥委員 그것은 토론할 사항은 아니니까 참고로 하기는 하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학술진흥재단에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기는 하겠습니까마는 어느 특정기관을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방향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직접 가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가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3섹터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가령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은 몇 년간 프로젝트인지, 어떤 것은 더 장기간으로 가는 것인지 아주 상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 조절장치 같은 것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대학에 관해서만 말씀드린 것인데요.

그러니까 어느 기관이 통제한다는 개념보다는 전반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인풋이 다 들어오고 인풋 들어온 것에 대해서 어디는 중복도 좀 있든지 중복되기 때문에 이왕 줄 것이라면 어디에다 주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것을 조정하는 조정기구 같은 것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아웃풋, 산출되는 것에 대해서도 해당 자금을 지원하는 쪽에 대해서만 보고되는 것이 아니라 아웃풋에 대한 관리들도 종합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교육부 자체 재원에 대해서 어떻게 배정해 나가고 이런 것만 가지고 좁은 의미에서 우리가 고민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가 아니라 사실은 더 많은 펀드들이 더 많이 생각하고 민간자원에서도 많이 나와야 될 것이고 또 많은 민간자원의 펀드를 유치할 수 있는 쪽으로 더 활성화되어야 될 것이고 말이지요. 그런 점에서의 어느 조절기구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펀드가 더 많아지니까 배분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정책적으로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이런 점에서 말씀드린 취지라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싶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그러면 다음은 한국학술진흥재단 韓民九 교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述人 韓民九 李源馥 위원님께서 서면질의해 주신 것인데 구두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질의사항은 '선택과 집중의 책임을 정부가 지는 형태는 그 후유증이 더 큰 것이 아닐까요' 하는 좋은 질의신데요. 저는 정부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향후에 필요하고 국내 인력수요가 있고 산업과 연계되고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를 선택해서 집중하는 것은 무사안일주의를 탈피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인력양성을 한다는 것을 생각해서, 물론 후유증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정부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인력수급에 대한 계획으로 보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은 굉장히 좋은 질의신데요. BK21 프로젝트에 대한 지나친 선전, 왜곡된 선전이 많아질 때 이것이 오히려 고학력 거품의 풍토

만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그 후유증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것은, 교육부에서는 BK21에 대해서 지나치게 선전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많은 교수님들께서 더 뜨거운 관심을 가져주셔서 선전이 되고 관심이 되었지 교육부에서는 비교적 홈페이지나 웹이라든지 소규모 공청회 이런 의견수렴을 했지 지나치거나 왜곡된 선전은 없었던 것으로 저는 보았습니다. 물론 다른 데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서상으로는 없었고요.

그래서 그 후유증 문제는 고학력 거품 그것이 오히려 더 좋은 점은 현재 우리 나라가, 선진국도 그렇습니다마는 국가의 경쟁력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이 박사과정이나 대학원 오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사실 외국 유학생들이 없으면 대학원 유지가 안 될 정도로 미국 학생들 스스로가 의사나 판·검사를 한다든지, 우리나라도 그런 현상이 지금 많습니다. 힘든 학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겠다는 것은 경제가 커질수록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학력 거품은 아니지만 유능한 인재들을 대학원으로 유입하는 전략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학생들이 은행으로 간다든지, 고시를 본다든지, 인력수급이 그런 단기적 승부로 가는데 오히려 유능한 인력을 학계로 끌어들이 수 있는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다만 거품을 안 생기게 하는 것이…… 그래서 교육부 방침은 대학원생 수는 증가를 안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BK21에 참여하는 대학에 그 분야에는 대학원생을 증가시키지 않고 오히려 현재 상태가면서 내실 있는 교육을 한다니까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경쟁력 있는 대학원육성지원시책이라는 용어를 쓰면 되지 굳이 BK21이라는 프로젝트 브랜드화, 또는 정치선전용화 함으로써 많은 오해와 왜곡 비판이 많아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BK21사업에 대학원육성만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BK21은 특화대학, 핵심분야, 지역우수대학, 과학기술·인문·사회대학원 해서 굉장히 다양한, 오늘도 보면 많은 논쟁이 대학원중심대학 이렇게 가는데 그것은 전체 예산 2,500억 중에서 한 40%가 대학원육성으로 들어가 있고 많은 부분이 학사과정 내실화 또는 아까 말씀하신 지방이나 어떤 대학에서 묵묵히 연구하시는 분도 350억, 또 학술진흥에 500억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이것

을 대학원육성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사 과정, 개인연구자, 유능한 선도연구자, 협동연구자들을 육성하는 전반적인 두뇌한국, 그 이름이 반드시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많은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이름이 아닌가 해서 프로젝트 브랜드화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마는 오히려 좋은 인식을 여러분께 드린다고 생각해서 오해와 왜곡 비난이 이 Brain Korea21이라는 이름 때문에 생기는 것 같지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님, 애정있는 질의 감사합니다.

○委員長 咸鍾漢 감사합니다.

다음은 黃漢植 교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述人 黃漢植 吳陽順 위원님께서 질의를 안 해주셨더라면 서면질의만 나와서 대단히 섭섭할 뻔했는데 감사합니다.

아까 질의하신 내용은 BK21이 입안하는 과정에서 변질되지 않았느냐 하셨는데, 입안하는 과정에서 변질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입안에 참여하신 분들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제가 자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아마도 여기서 가장 잘 말씀해 주실 분은 張水榮 총장님이 아니신가 생각됩니다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금 세계 수준의 대학원중심대학 육성이라는 것하고 최우수대학이라는 것 해가지고 최우수대학은 완전히 들러리를 서 있고 대학원중심대학으로 가고 있는데 조금 전에 韓民九 교수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핵심이 중요한데 핵심을 흐트리면서 나열식으로 죽 얘기를 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었는데 진행과정에서 이분법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저는 오늘 여기서 문제의 핵심, 서로 입장의 차이랄까 논쟁의 핵심이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볼 때 교육부나 여기 입안하신 분들 몇 분 참여하고 계십니다마는 입안하신 분들이나 다른 분들의 핵심적인 차이는 무엇이겠느냐, 결국 이것은 몇 개 대학을 집중투자해서 특성화시키자 하는 집중투자 특성화의 논리입니다마는 집중시키고 특성화시키자 하는 것이 한국대학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냐, 저의 생각은 가져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체제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지금까지도 몇 개 대학 중심으로 이렇게 수직적인 불공정한 경쟁체제를 갖고 있었는데 그

불공정한 경쟁체제를 더 강화시키는 제도화된 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인데 지금 BK21은 완전히 불공정한 경쟁이다, 저는 특성화라든지 전문화라든지 이런 것도 공정한 경쟁을 전제로 한다면 저는 정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제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서 특성화하는 것은 과거 개발독재시대의 일방적인 재벌지원과 똑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과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회비용을 생각해야 하는데 몇 개 대학을 집중육성하는데 수많은 대학이 무너지고 하는 그 엄청난 기회비용을 어떻게 다 감당하실 생각이십니까?

아까 연세대학교의 어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학문, 기존에 있는 대학 이것을 발전시키는 기본을 유지하는 선 위에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것은 대학정책 자체를 기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고, 아까 朴承國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제가 지역에서 살아서 아니고 공감이가는 것이 BK21 모든 사업을 지역에 있는 대학에 다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이것은 단순히 좋겠다가 아니고 핵심적인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나 서울에서나 교육부에서 얘기할 때는 대한민국은 하나이고 서울은 대한민국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나가 아니고 부산도 있고 광주도 있고 대구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서울 1급 집중, 중앙집권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해왔는데 저는 이와 같은 서울 1급 집중이 아니라 정말 지역 균형발전, 지역의 주체적 발전, 브레인이 있는 발전, 지금 교육부의 정책은 형식적으로는 심사를 해서 경쟁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철학과 기본 전략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지역간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데 초점이 있더라든지 거점대학을 육성한다든지 뭔가 초점이 있어야 하는데 초점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하다보면 지역에서도 그물에 많이 걸릴 것이다, 세상에 하다보면 걸릴 것이다 하는 이런 것이 교육정책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정책, 기본전략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사실은 목표도 전략도 없는 것이고 형식만 경쟁하는 형식을 취하고 심사하는 형식을 취할 뿐이고 만약에 지방대학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렇게 나오도록 기준 자체를 제시해야 될 것인데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서면으로 저한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도 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수들이 참여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 아까 3자 협의체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지금은 참여민주주의의 시대가 아닙니까? 김대중 정부의 국정지표 제1호가 참여민주주의인데 왜 유독 대학교수 사회나 대학사회는 아예 대학교수의 참여를 배제시키는 참여민주주의의 허구성을 보여주고 있느냐, 같이 한 번 이야기를 해보자는 것 제 핵심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번에 BK21사업이 전면적으로 백지화되고 새 판을 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咸鍾漢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金日柱委員 한가지만 묻겠는데 여기에 농축분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教育部高等教育支援局長 金容炫 생명과학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장시간 여러 의견개진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우리 위원회는 진술인과 오늘 방청하신 교수님 세 분이 주신 고귀한 의견을 모두 함께 잘 수렴하여 BK21사업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진술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진술인 여러분께 우리 교육위원회의 위원 모두를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열심히 질의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오랜 시간 동안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대학원 중심대학 육성에 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산회)

○出席委員

咸鍾漢 李源馥 朴承國 安相洙
吳陽順 李在五 黃祐呂 朴範珍
盧武鉉 薛勳 金日柱 金顯煜

○委員아닌出席議員

李富榮

○出席專門委員

專 門 委 員 尙 元 鍾

○出席陳述人

權旭鉉(서울大學校教授)

李在潤(前全國私立大學教授協議會聯合會會長)

張水榮(浦項工科大学校教授)

韓民九(韓國學術振興財團事務總長)

黃元杰(全南大學校教授)

黃漢植(全國國·公立大學教授協議會會長)

○出席參考人

이영문(慶北大學校教授)

박대현(延世大學校教授)

【報告事項】

○常任委員選任

教育委員會

한나라당

安相洙

(6월9일자)

○常任委員辭任및補任

委員名	辭任委員會	補任委員會	交涉團體
梁正圭	行政自治	教 育	한나라당
金永俊	行政自治	教 育	한나라당
吳陽順	教 育	行政自治	한나라당
黃祐呂	教 育	行政自治	한나라당

(4월30일자)

委員名	辭任委員會	補任委員會	交涉團體
李在五	法制司法	教 育	한나라당
孫世一	行政自治	教 育	새정치국민회의
鄭均桓	教 育	行政自治	새정치국민회의

(5월7일자)

委員名	辭任委員會	補任委員會	交涉團體
梁正圭	教 育	行政自治	한나라당
金永俊	教 育	行政自治	한나라당
吳陽順	行政自治	教 育	한나라당
黃祐呂	行政自治	教 育	한나라당

(5월31일자)

委員名	辭任委員會	補任委員會	交涉團體
申樂均	環境勞動	教 育	새정치국민회의
朴相千	教 育	統一外交通商	새정치국민회의

(6월2일자)

委員名	辭任委員會	補任委員會	交涉團體
李相賢	教 育	環境勞動	한나라당

(6월9일자)

委員名	辭任委員會	補任委員會	交渉團體
孫世一	教 育	保健福祉	새정치국민회의
李榮一	統一外交通商	教 育	새정치국민회의

(6월15일자)

委員名	辭任委員會	補任委員會	交渉團體
李在五	教 育	法制司法	한나라당
河舜鳳	法制司法	教 育	한나라당

(6월25일자)

委員名	辭任委員會	補任委員會	交渉團體
李在五	法制司法	教 育	한나라당
河舜鳳	教 育	法制司法	한나라당

(6월30일자)

○議案回附

時局事件關聯教員任用除外者採用에 관한特別法案

(4월23일 薛 勳·張永喆·孫世一·朴範珍·盧武鉉
·金瑋鎬·朴相千·鄭均桓議員의 97인 발의)

4월23일자 회부됨

學校給食法中改正法律案

(4월26일 李海龜·李相培·李吉載·鄭宇澤·金文洙
·金秉泰·盧承禹·鄭一永議員의 21인 발의)

4월28일자 회부됨

廢止된學校財産의活用促進을위한特別法案

(5월21일 정부제출)

5월24일자 회부됨